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시작,
희망의
새 이름



2022. 01

VOL. 662

2022년 제21대국회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민의 내일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CONTENTS



04



30



32

국회보

2022 JANUARY / VOL. 662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2년 1월 3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위원(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이복우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성종호(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주)이팝 02)514-7567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 공식 방한한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회담
'대화와 타협'의 정기국회, '의회정치 부활' 신호탄
박병석 국회의장, 육군 제6보병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17 특집 -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포부와 다짐

30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 양성 등 주요 과제 해결할 것
_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일상회복 위한 방역체계 수립,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 다할 것
_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34 길에서 길을 찾다 _김원이 의원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 목표 새로운 비상 꿈꾸다

38 의원의 좌우명 _구자근 의원

'본심'

40 칭찬합시다 _홍정민 의원

'경청'과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

4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이종성 의원

장애인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4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탄소중립', '서민금융'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3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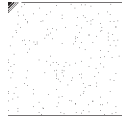
40



42

**표지 이야기**

2022년은 어느 때보다 '시작'이라는 단어에 큰 희망을 품게 합니다. 국회는 희망을 씨앗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47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영아수당 지급법',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등 의결

58 법률 시대를 읽다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_정연호

60 국회 주재관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미 연준의 긴급 통화정책과 미 의회의 대응 _김경신

64 법 시행 그 후

수산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

66 만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68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오디오의 미래를 이끌다'

70 위원회는 지금

국회,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74 국회 뉴스**80 기고**

"국회방송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_임광기

82 국회 사람들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해 최고의 시절로 기억될 것"

84 이달의 서평

처음 읽는 정치철학사 _윤비

86 고전의 향연

새 날을 맞으며 어린 백성들(愚民)을 배려했던 세종대왕을 생각한다 _신승운

88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광활한 영토 정복하고 이슬람 교육 제도의 기반 세운 셀주크 왕조 _이광태

91 국회의 꽃과 나무 이야기

'남천'

92 속기록으로 본 이달의 의정사

24시간 본회의로 1월 1일 퇴근한 국회 직원들 _윤승희

94 우리 건축 이야기

누정(樓亭) - 실내도 실외도 아닌 제3의 공간 _임석재

98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지리산 _유인근

102 바이러스의 역사

흡혈귀와 '광견병' _도현신

104 국회 미술관

인류학자로서 화가 김명희의 평화예술 _김준기

108 생활 속 우리말글

낯선 언어 가득한 '공문(公文)' _김풍기

109 정치 관련 주요 일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최

종전선언·평화협정·남북국회회담 지지 결의안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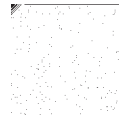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9차 APPF총회 개최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국회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이하 제29차 APPF)’ 총회를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 까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23년 만에 총회 의장국을 맡은 대한민국국회는 행사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체

계를 준비했으나,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를 의 무격리하기로 하면서 화상회의로 변경했다.

제29차 APPF 총회는 총 22개국에서 211명의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본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메인 의제로 제1세션 '정치·안보', 제2세션 '경제·무역', 제3세션 '아·태 지역 협력', 여성의원회의 등 4개 워킹그룹에서 총 13개의 세부 의제를 논의했다.

APPF 총회 폐막식에서는 수차례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남북국회회담'과 '중전선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APPF 총회 첫날, 성평등 실현 등 주제로 '여성의원회의' 열려

본회의의 첫째 날인 12월 13일에는 양성평등 실현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4개국 의회대표단이 참석한 '여성의원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하고,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발언했다.

회의에서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모색',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강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 등 2개 의제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발언했다.

양금희 의원은 "대면 접촉 기반 서비스 직종이 사라짐에 따라 많은 여성이 실업을 겪었고, 일부는 육아시설·돌봄시설 등의 폐쇄로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위해 퇴직을 선택해야 했다"며 코로나19 충격은 여성에게 보다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남긴 여성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분명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팬데믹·경제·기후위기, 담대한 협력과 연대 긴요"

본회의의 둘째 날인 12월 14일에는 '제29차 APPF 총



12월 13일 열린 '여성의원회의'를 주재, 발표 중인 남인순(위)·양금희 의원

회' 개회식과 제1세션(정치·안보 문제), 제2세션(경제·무역 문제)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총 17개 의회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한 개회식에서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의 회의 개최 경과보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환영사,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의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토니 스미스 APPF 회장의 축사와,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경제 위기·기후위기는 삼각 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궈나가자"면서 "위기의 시대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 협력과 포용적 연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월 14일에 열린 제29차 APPF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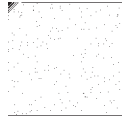
박 의장은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지역 내 국가 간 백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 붙였다. 박 의장은 또 “실제 코로나 팬데믹은 여성, 고령자, 이민자 등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면서 “취약계층이 새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담장이 생겼다”면서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각국 의회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박 의장은 “발등에 떨어진 전 지구적 과제”라며 “대한민국국회는 넉 달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대한민국국회의

기후 대응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했고,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박 의장은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 의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기문 의장은 “아·태 국가들의 성장세가 무섭다”면서 “상당히 유망한 공동체”라고 화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과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이사회 의장이
12월 14일 APPF 총회 개회식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1세션 정치·안보, 2세션 경제·무역 문제 논의

개회식에 이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제1세션이 진행됐다. 13개국 의회 대표단이 참석한 제1세션은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했다.

각국 대표단은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의회 리더십, 역내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법 규범 및 규칙 기반 문제 해결, 인간안보 보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 증대, 한반도 평화, 아·태지역의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등 총 5개 의제를 놓고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APPF 회원국 의원님들의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지 못한 채 68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한반도

는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가의 공동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적대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간·북미간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화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무역 문제를 논의하는 제2세션이 진행됐다. 14개국 의회대표단이 참석한 제2세션은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주재하고,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했다. 각국 대표단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경제 복원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연결성 강화, 역내 경제 통합 증진 및 무역 활성화 등 총 3개의 의제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APPF 총회 제1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협·김한정 의원(왼쪽)과 제2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권인숙·윤창현 의원(오른쪽)

권인숙 의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경제적 회복 속도가 성별·연령별·인종별·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 및 낙후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3세션 아태 지역 협력 문제 논의

본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결의안 기초위원회, 제3세션(아·태지역 협력 문제)과 제4세션 및 폐회 식이 진행됐다. 제4세션 및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논의 한 총 13개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이 최종 채택됐다.

13개국 의회대표단이 참석한 제3세션은 박진 의원 (국민의힘)이 주재하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했다. 각국 대표단은 방역·경제·인권의 조화를 위 한 의회의 역할 및 의회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공동행동, 아·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등 총 3개 의 제에 대해 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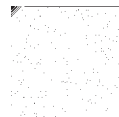
22개국 의회대표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

13개 결의안 채택

폐회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해 호주, 캐 나다, 중국 등 22개국 의회대표단과 ‘초국가적 문제 해 결을 위한 다자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과 13개 결의안이 채택됐다.

특히 13개 결의안 중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 북국회회담 등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 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 정치안보, 경제무역, 아태지역 협력, 여성권리 증진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의지를 결의안에 담았다.

박 의장은 폐회사에서 “우리는 아태지역의 평화증



박진 의원(오른쪽)이 주재한 제3세션에서 강선우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진과 경제협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총회에서 다시 천명했다”면서 지역경제통합 증진, 자유무역 확대 등 다자주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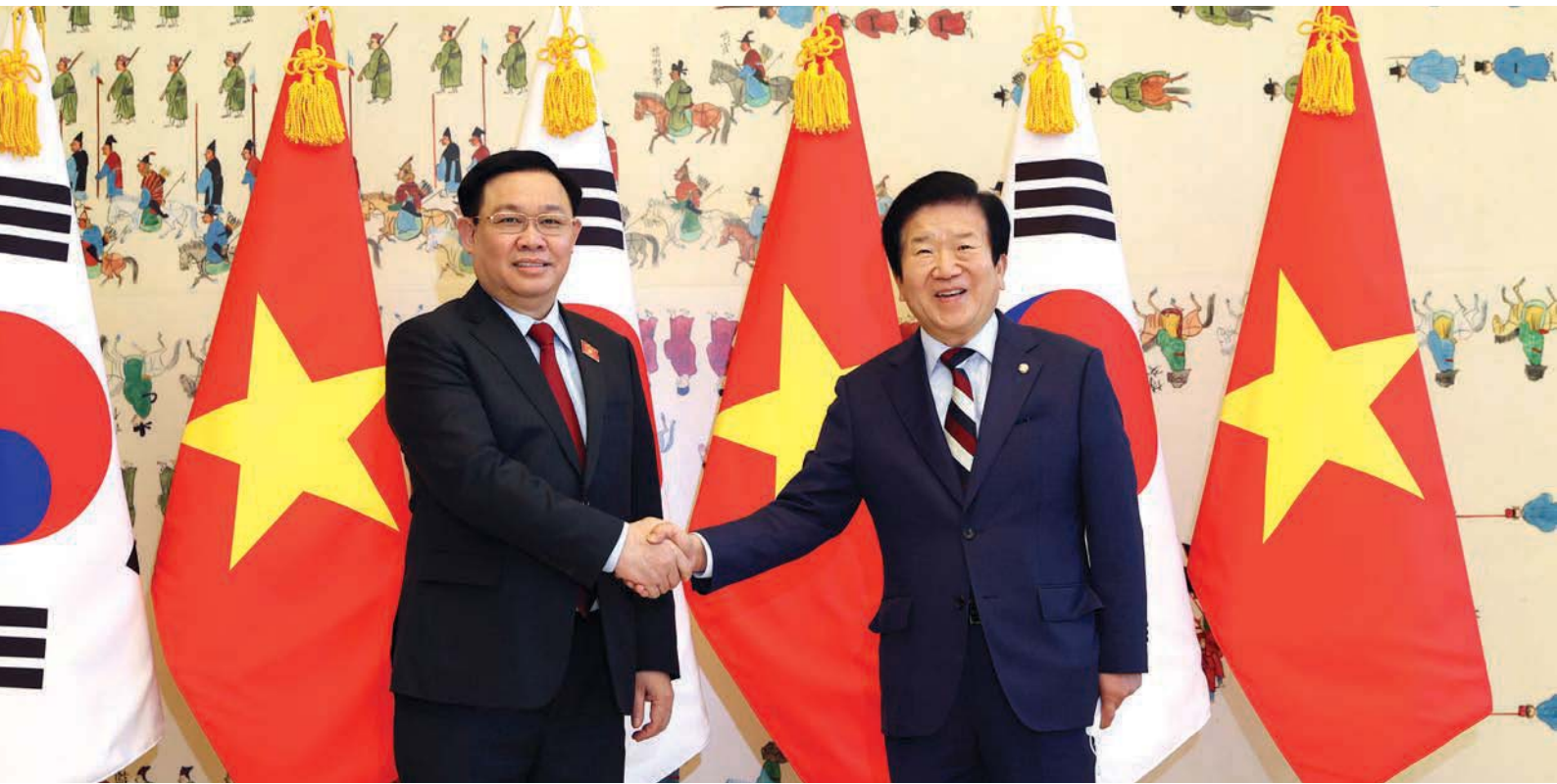
또한 박 의장은 “역내 현안은 물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놓고 대표단간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 유익한 결과물을 이끌어냈다”며 총회 성과를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코로나19로 훼손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선 국경을 넘는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APPF는 세계 최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상응하는 의회 주도의 아태지역 포럼으로,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의회협력체다. 대한민국국회는 APPF에 꾸준히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제30차 총회는 태국에서 열린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월 15일 제29차 APPF 총회 폐막식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22개 회원국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12월 13일 국회를 방문한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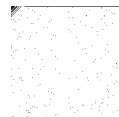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 공식 방한한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

외교 관계 격상·경제협력 확대,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지속 등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13일 국회접견실에서 박 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경제와 사회 전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요소수 확보 등 글로벌공급망 유지, 국내 기

업 필수인력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지속, 방위산업 등 국방안보분야 협력 강화, 사회보장협정 정식 체결 등이다. 박 의장은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한 달 앞두고 오셨는데,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박 의장은 베트남 국민 방문 시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3개국과만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는 베트남 내 최고 수준의 양자 관계를 뜻한다.

후에 의장은 이에 대해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한국 방문은 베트남 새 지도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로 이뤄졌다. 앞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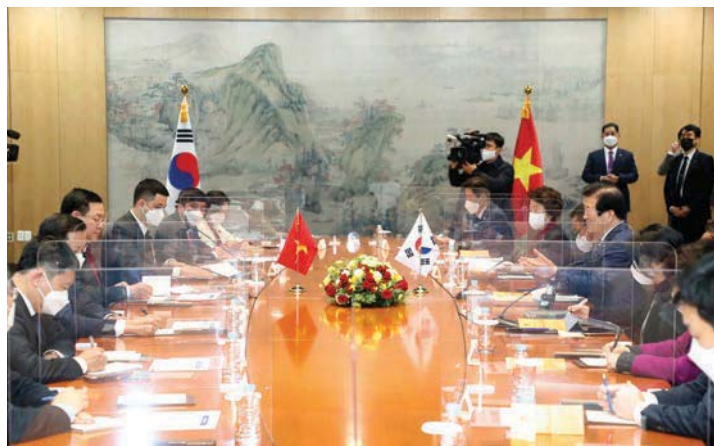
베트남은 2021년 4월 후에 의장을 비롯해 응우옌 쉰웁 폭 국가주석, 팜 밍 쩡 총리 등 새 지도부가 공식 선출됐다. 특히 후에 의장은 이번에 부총리를 비롯해 각료 6명과 국회의원·차관 등을 대동해 국가원수급 방한대표단을 꾸렸다.

베트남 후에 의장 “안정적인 요소 공급” 약속

박 의장은 “미중의 경쟁 그리고 기후위기, 팬데믹 등으로 세계 공급망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한때 한국이 요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베트남에서 긴급 지원을 해준 점 감사하다.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요소 공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요소 및 요소수 관련 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긴급 확보한 요소와 요소수는 각 8천200톤, 320만 리터다.

이어 박 의장은 “한국 경제인들의 베트남 입국에 있어서 특별입국절차 간소화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의 배려로 지난 10월에 특별입국절차가 재개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유지되어야 양국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13일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가운데)과 베트남 국회의장의 회담 모습

후에 의장은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요소를 공급하기로 한 약속은 유지될 것”이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필수인력 입국 절차 간소화 시책은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며 “우리 베트남 정부는 새해 국제항공편 재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서울을 오가는 직항편 노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에 의장은 또 2032년 양국 교역액의 목표를 1천500억 달러로 제시하는 등 교역을 비롯한 경제분야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양국 의장은 국방·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후에 의장은 “유엔 평화 유지와 범죄 방지 및 테러 방지 등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베트남의 해상 전력 구축을 위해 한국의 함정을 지속적으로 이양하는 프로젝트가 강력하게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에 “함정의 지속적인 이양 문제는 정부 당국에 뜻을 전달하겠다”며 “방위산업 관련 세미나를 열어 양측이 실질적으로 교섭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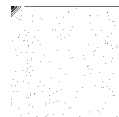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12월 17일 국회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17일 국회접견실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희소 금속 등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2021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예방한 적이 있어 이번 회담이 두 번째다.

박 의장은 “오늘 ‘희소금속과 동합금생산기술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희소 금속이 필요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소재부품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오늘 한-우즈베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12월 17일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키스탄 전자반도체클러스터를 우즈베키스탄에 조성하자고 제안했는데, 문 대통령께서 제안을 받아주시고 지지해주셨다”며 전자소재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우호국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은 텅스텐(생산량 세계 19위, 매장량 세계 6위)과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12위, 매장량 세계 10위) 등 희소 금속 보유국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대외무역부 등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

이날 회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당시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약속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요청하신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경협 프로

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도록 직접 챙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310㎿급 가스발전소 증설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6억 달러 규모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외에도 타슈켄트-안디잔 유료 고속도로(총 사업비 20억 달러) 사업과 타슈켄트-사마르칸트 유료 고속도로(총 사업비 10억 달러)를 추진 중이다.

이어 박 의장은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 전자의회 시스템 도입에 관해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우즈베키스탄 상원의회에 개설될 한국 협력 전담 특별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022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자 고려인 정착 85주년인 뜻깊은 해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85년 전 극동에서 온 고려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포용력 있는 분들이다. 고려인이 양국의 든든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화와 타협’의 정기국회, ‘의회정치 부활’ 신호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12월 9일 열린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 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다”며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사실상 예산안을 2년 연속 법정 기간 내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 1천70여 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의 핵심 ‘세종의사당설치법’ 여야 합의 통과”

박 의장은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인 ‘국회세종의

사당설치법’도 통과시켰다”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점도 언급했다. 또 박 의장은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전 반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07건을 포함해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등 군(軍) 문화 개선법안, △‘대장동 사건 후속법’, ‘LH사태 후속법’ 등 부동산 시장 건전화 법안,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1년 12월 9일 열린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 △디지털 기술을 산업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국회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제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 607조 6천억 원 규모 예산안 의결

이에 앞서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에서 607조 6천633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은 정부안 604조 4천365억 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5천520억 원을 감액하고 8조 7천788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3조 2천268억 원이 순증액된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천650억 원이 증액되고,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 4천 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천516억 원 및 중증환자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

산 3천900억 원이 증액됐으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 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한 2천394억 원 증액 및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해 국세수입이 총 4조 7천349억 원 순증액됐으며, 국세 수입 순증액에 연동해 지방교부세 1조 6천886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천588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국회는 12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포함해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이외에도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을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위생을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해 35년 만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월 20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육군 제6보병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 물 쉴 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

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어 “여러분의 능률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포부와 다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새해 포부와 다짐, 그리고 국회 전망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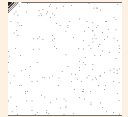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여야 모두 선국후당 자세로 가다듬어야”

(先國後黨)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외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혁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임인년, 통합의 에너지로 코로나 국난 극복하자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 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경쟁하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임인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국회의장 박병석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해 되길”



김상희
국회부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2022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인류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세대간, 직업간, 성별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심각합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를 신종 감염병 앞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획기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혁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포석으로, 제21대국회는 지난해 여섯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민생개혁, 경제활력 등 당면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민의의 본뜻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격에 걸맞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지난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대한민국에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외적 국격은 상당히 격상됐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진국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성평등 아젠다에서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 102위로 오랫동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별임금격차,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 모두 최하위권입니다. 정치 영역의 여성 대표성 역시 국제 평균에 못 미칩니다. 전세계 국가의 평균 여성 비율은 25.6%인데, 제21대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헌법에 새겨진 국민과의 약속이자, 저출생·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치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에 101명의 국회의원께서 동참해주신 이유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원칙인 만큼, 제21대국회가 성평등 국회로 자리 잡는데 이번 결의안이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 인권 탄압 문제에도 목소리 높이는 국회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잇따라 벌어지는 인권 탄압으로 아프간 여성과 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과 혼란이 예견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49명의 여야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고를 보내야 탈레반의 인권 탄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국회가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를 북돋고 서로를 위로하며 역경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킵시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을 다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건위수명의 각오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정진석
국회부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의 굳센 기상과 용맹함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으려는 소망이 또 좌절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기승입니다. 소상공인, 영세상인, 농어민들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호흡하는 일상으로 기필코 돌아가야 합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21대국회에 들어와서 다수결 독재와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21대국회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점이 시정되어 지난해 8월 말, 국회부의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 국회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 회복

첫째,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지켜온 의회의 관행과 질서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 여야 정치인이 만든 의회의 관행과 절차 규범은, 법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표결할 때까지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이 가치를 소중히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살의 흐름을 늘 간파하고 있어야 작은 조각배라도 망망대해를 순탄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가 국민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해준 권한을,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정한 소통 위한 경청의 자세 필요

셋째, ‘경청(傾聽)’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야가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신들의 뜻과 유불리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대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접어두고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진정한 소통을 위한 ‘경청의 길’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삶은 비로소 편안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국회의 변화를 견인해야 합니다. 국회의 변화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합쳐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EO였던 잭 웰치는 “변해야 할 상황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변화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쇄신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새로운 시대 열어야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새롭게 여미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습니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의 각오로 우리 앞에 닥친 안팎의 고난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우리 국회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꿈과 내일을 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국민 곁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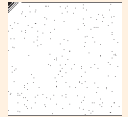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기대가 크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전쟁에 걱정이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은 삶이 더 어려워졌고, 민생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후 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앞다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빅데이터, AI, 네트워크 산업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환은 언제나 위기를 동반합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환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새해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국민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 종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임해왔습니다. 방역으로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했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예산 확보

올해 예산안에도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예산을 더 두텁게 확보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70조 원 예산과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릴 지역사랑상품권도 30조 원으로 확대 발행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 관련 예산도 챙겼습니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킬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 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제 도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경제 활력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을 이뤄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작년, 사상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과감히 혁신하는 국가만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의 통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 특례 같은 기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 대전환 정책이 뒷받침될 때, 선도형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전략산업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액운을 물리치는 상징 호랑이해,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것

개혁에 끝이 없고, 쇄신에 쉽이 없다는 것을 새기며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상을 바로 잡고, 투기를 막아달라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을 처리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 법도 조기에 처리해 개발 비리를 막아내고 국민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와 포털 공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또한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액운과 불행을 물리치는 상징이자, 산군(山君)으로 불리며 정의와 공정을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민과 동고동락하며 민생 챙기는 데 주력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영물(靈物)입니다. 호랑이처럼 진취적이고 용맹한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다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일자리, 부동산, 세금폭탄, 국가안전보장, 국민 통합,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중요한 국정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으로 2021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고, 여전히 우리 앞에 쌓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총체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은 오히려 국민의 기대와 점점 괴리되어 왔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조국 사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비리인 대장동 게이트, 언론법 개악시도 등 국민의 삶과는 유리된 채 선택받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법 폭주, 사법 파괴, 행정 장악으로 브레이크 없이 독주해온 집권 여당은 ‘꼰수기(꼰대, 수구, 기득권)’로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의 역할

국회와 정치 그 본연의 임무가 국민 행복에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도 권력 쟁취나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행복에 있어야 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어야 합니다.



새해, 우리 국민의힘은 민의를 더욱 무겁게 받들고 더 낮은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정권은 결단코 존립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동고동락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

올해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5년처럼 뒷걸음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약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상식과 정의, 공정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힘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이 ‘살리는 선대위’입니다. 희망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반칙에서 법치로,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제1야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책무인 만큼 그 소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동토에도 싹이 트듯

끝이 안 보이는 암흑의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의 잘못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경고의 채찍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다시는 일탈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하고, 국민만 섬기는 정치의正道(正道)를 걷겠습니다.

차디 찬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동토에도 싹이 트듯이,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한 해로 만들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강하고 힘차게 뛰면서, 정의가 살아 숨쉬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임인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민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폭설 등 대형 재난이 세계 곳곳에 찾아들면서 기후위기가 커다란 과제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가깝게, 국회 문턱을 더 낮추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사무처는 지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중단없이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합 의처리해냈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올해 예산안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가다듬었습니다.

국민 동의의 청원의 문턱을 낮춰 헌법상 보장된 국민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 개원 이후 최초로 운영된 원가검증자문단을 통해서도 국회 주요 재정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해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국회는 행동과 실천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도 행동과 실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다 함께, 더 오래!’ 캠페인과 함께 경내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와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확충했고, 각종 인쇄물 발간 축소 및 디지털 발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저탄소·친환경 국회 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2030년 디지털 기기 보급을 통한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를 목표로 국회 주요 간행물의 종이 발간 부수 20%, 종수 5%를 감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원칙 아래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문의 단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쾌거를 일궈냈고, 중반기에는 도쿄올림픽에 나선 태극 전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국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기록적인 흥행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디다만, 올해는 우리 국회가 365일, 매순간마다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한반도 지형과 꼭 닮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 19라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다시 찾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 시작과 끝은 모두 국민입니다. 새해에도 저희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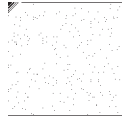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 양성 등 주요 과제 해결할 것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시병

**Q. 2022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여당 간사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2022년은 정부가 바뀌는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의 과제를 세우는 때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며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 강화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고 부

양의무를 폐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또한 중요한 국정과제였습니다. 기초연금 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의 노후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헤



택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의료비 지출 자체를 통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은 기간 애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이제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복지혜택을 못 누리는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해 복지위가 거둔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병 대응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방역강화, 백신도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사회적 찬반 여론이 나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수술실 CCTV 설치를 오랜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4년여 만에 통과된 것도 성과입니다. 앞으로 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역할이 양적·질적으로 제고되지 않으면 신종 감염병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건립과 의료 인력 양성은 올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매일 아침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심각한 노후 빈곤 국가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방식의 연금개혁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복지위의 야당 간사님이신 강기윤 의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야는 서로 철학과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강기윤 간사님은 항상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다 보면 차츰 이견이 해소되고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강기윤 간사님과 함께 할 때마다 서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서 복지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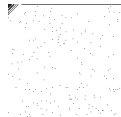
일상 회복 위한 방역체계 수립,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강기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Q. 2022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야당 간사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많은 국민께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에 이르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건강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위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지원과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손실보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지난해 복지위가 거둔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안타깝게도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은 부모에게 저항하기가 무척 힘들고 한번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가게 됩니다.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복지위는 아동학대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의 무화, 현장조사 출동 시 출입 권한 확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조사, 응급조치 기간 연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상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도입이 최우선임에도 백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신 사전 구매 계약을 주저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백신접종률이 작년 상반기까지 세계 꼴찌에 머무르는 등 백신 보릿고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고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복지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A.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종식시켜 국민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여행이나 레저 활동 등 여가 생활을 멈추고 착실히 방역정책을

따라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과 출입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가 지속돼 매출타격은 물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는 등 그 누구보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은 주말,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의 위협에 맞서며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모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방벽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한다거나, 소규모 식당은 영업시간 및 출입인원을 제한하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자유롭게 합니다. 한때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하고, 음악의 빠르기를 100~120bpm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 행정편의적인 방역기준을 타파하기 위해 의협 등 의료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증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증을 악화시키고 의료인력 번아웃을 재촉하는 문제, 요양병원의 낮은 수가 산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복지위의 여당 간사님이신 김성주 의원님께 칭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년간 김성주 간사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구나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탁월한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간사님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도 국민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해 저와 함께 힘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 목포

새로운 비상 꿈꾸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목포시

맛과 멋의 고장으로 유명한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근대사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대표적인 항구도시다. 일제강점기에는 목포항과 목포역(호남선)을 통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일본으로 실려 나가고 일본에서 가공된 물자들이 모여 내륙으로 운반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김원이 의원을 만나 자연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 목포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왜적 물리친 노적봉과 목포 역사 살펴볼 수 있는 목포근대역사관

김원이 의원을 만난 날, 목포는 전날부터 내리던 겨울 비가 계속되면서 곳곳에 안개가 자욱했다. 이날 첫 일정은 유달산 봉우리 중 하나인 노적봉에서 목포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시작했다.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은 높이 228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목포시와 다도해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의 아름다운 모습과 목포 시가지, 다도해 등

을 감상하며 목포 여행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적봉은 해발 60m의 바위산에 불과하지만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호국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정유재란 때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조선의 군사와 군량미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왜적의 배들이 유달산 앞바다에 진을 치고 조선군의 정세를 살피고 있었는데, 쳐들어오면 바로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꾀를 냈습니다. 노적봉 바위를 벼짚으로 덮어 군량미가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바닷물에 백토를 풀었습니다. 조선이 엄청난 군량미를 확보하고 있고, 바다에 쌀뜨물이





목포시 서산-온금동 구(舊) 조선내화 앞 해안길에서

흘러넘칠 정도로 많은 군사를 위해 밥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해 왜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이 봉우리를 노적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적봉을 내려와 인근에 위치한 목포근대역사관 1관을 찾았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1898년 일본이 영사관으로 지은 것으로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광복 후에는 목포시청, 목포문화원 등으로 사용되다 2014년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개관했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2층 규모에 총 7개의 주제로 꾸며져 있는데 목포의 시작부터 근대역사까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근대역사관과 주변 지역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중심지였던 곳”이라며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물들을 둘러보면 근대적 계획도시였던 목포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1987’의 배경이 된 서산동 시화골목과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서산동 시화골목은 목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조성한 곳으로, 시인 10여 명과 서산동 주민들이 지은 시를 목판화에 새겨 담벼락에 걸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꾸몄다.



근대문화역사관 1관



서산동 시화골목에서



목포종합수산물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원이 의원

“개항 후 일본인들이 목포 도심을 장악하면서 가난한 조선인들은 유달산 자락으로 밀려났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서산동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평범한 달동네였던 서산동은 이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에 의해 시화골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에는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 생활 인프라를 설치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화골목은 영화 ‘1987’에서 연희(김태리)네 집으로 등장한 ‘연희네슈퍼’에서 시작된다. 연희네슈퍼를 지나면 바로 ‘시화골목’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고 곳곳에 시와 그림으로 꾸며진 골목을 만날 수 있다.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리마당’은 타작할 마당이 없던 서산동 주민들이 함께 모여 타작을 했던 너른 공터다. 김원이 의원은 “이곳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낙조가 일품”이라고 자랑했다.

목포 동쪽바다에 위치한 삼학도는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가 나란히 있던 곳이다. 1960~70년대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됐다가 10여 년간의 복원사업 끝에 다시 섬이 됐다.

“평지가 되어버린 삼학도를 되살려내기 위해 흙과 자갈로 원형에 가깝게 봉우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물길을 냈습니다. 삼학도 곳곳에는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고 오솔길과 자전거 도로도 놓았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삼학도에 위치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았다.

“저는 학창시절 ‘김대중의 옥중서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등을 읽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에 진학한 후 학생운동에 몸담게 됐습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제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소개하고 민주주의·인권·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 대통령 임기동안의 활동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목포 삼학도에 위치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목포역·근대 문화 역사지구 개발과 목포의대 유치에 총력”

김원이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가장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목포에서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의원을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대학 입학 후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제적 당하고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한 그는 그 후 고향인 목포로 내려와 지역운동에 헌신하기도 했다.

구청장 7급 비서로 시작해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시 정부보좌관과 정부수석비서관을 거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한 김원이 의원은 그 덕분에 정치·경제·행정·교육의 각 분야에서 두루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평을 듣는다.

김원이 의원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목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목포역 지하화와 구도심 개조를 통해 관광도시 목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라는 목포역의 상징성에 걸맞게 신역사를 건축하고 목포역을 지하화해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목포역에서 근대 역사문화관까지 트램을 설치해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역사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대문화역사지구의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이룰 계획입니다.”

그는 지역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목포대 의대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선택해 2020년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관철시켰습니다. 현재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지만 지난 30여 년간 계속돼온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는 하늘길, 바닷길, 철길, 도로의 시작점이자 근대 역사 문화의 수도”라며 “문화적 자산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개항 123년을 맞은 목포가 그동안의 정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비상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전남 목포: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본심(本心)

있는 그대로의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라는
가르침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상북도 구미시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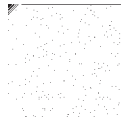
경북 구미시의원과 경북도의회를 거쳐 제21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구자근 의원의 좌우명은 ‘본심(本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집안의 가장 큰 가르침이 본심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본심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2011년 대구·경북권 신공항 유치에 위해 380km의 거리를 마라톤으로 상경하는 ‘밀양 신공항 유치기원 마라톤’ 행사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국제공항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동남권 신공항 유치 열망을 전국에 알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시민들께서 마라톤으로 일주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청을 출발해 하루 20km 이상을 약 20일간 뛰어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수 있는 강행군이어서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계획이라 마음이 어렵고 분주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미시 육상연맹 회원들과 마라톤 클럽 동반 주자들이 구자근 의원을 격려하며 페이스 메이커까지 자처했다. 구자근 의원은 “솔직하게 부족함을 인정하면



서 그룹에도 약속은 꼭 지키고 싶다는 제 본심을 정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민들도 진심으로 함께 해주셨고 덕분에 완주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수의 가치 증명하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될 것”

대학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한 구자근 의원은 이후 고향과 세상을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게 됐고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학우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필요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등록금 문제나 학내복지 향상을 위해 대학 측과도 열심히 협상에 나섰지요. 제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학업환경이 개선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학교와 타협점을 찾아낸 덕분에 교우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교활동을 하면서 ‘내 고향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한다면 구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의원 후보에 등록했지만 고배를 마신 그는 절치부심 끝에 결국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구미시의원으로 선출돼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됐다.

제21대국회 입성 후 구자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내 유턴 기업의 지원 조건을 확대하

고 산업단지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이밖에 구미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법안, 뿌리산업단지 지원 법안도 등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는 탄소산업 진흥을 위해 반도체·2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를 구미에 구축하는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는 ‘보수의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공명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도시”라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보수의 가치가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구미에서 한 번 더 발현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로 무장하고, 스마트 산단·디자인 제조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의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되면 구미는 다시 한번 보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미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 숙원사업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역량을 집중해왔던 북구미IC가 일부 개통했습니다. 완전개통과 함께 군위JC까지 연결하는 전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미다운 당당한 정치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경청’과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칠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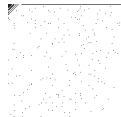


2022년 임인년(壬寅年) ‘칭찬합시다’의 첫 번째 주인공은 홍정민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위해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는 멋진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정 의원님과 최근 소상공인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는데 여야에 관계없이, 민생과 직결되고 논의가 필요한 이슈였다. 이런 의정활동을 믿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동료 의원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아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전에는 경제학 박사, 변호사, 대기업 경제연구소

연구원,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희용 의원은 홍 의원을 “경제와 법률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노력을 하면 취업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너무 힘듭니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지만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발전해서 규모가 커졌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해결할 때 보람 느껴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글로벌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국내행정권력의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해 높은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 사용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름값이 너무 올랐죠. 지난 국감 때 최초로 산자부에 유류세 인하를 건의했고 다행히 정부에서 검토가 잘 돼, 유류세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혁신 생태계에 정책적인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 ‘정치하길 잘했구나’라고 보람을 느끼죠.”

홍정민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는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시장의 규모는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신설법인인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섰고,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우수인력 유입, 하이테크 창업 장려,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창업환경을 고도화하는 과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구 현안도 빼놓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역구를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인구 백만이 넘는 곳은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4곳인데,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이 도청소재지거나

산업기반을 갖춘 곳인데 반해 고양시는 지역 내 기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회사가 가까워야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일산 뿐 아니라 전국 여러 도시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그리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물었다. 홍정민 의원은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고 답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마음가짐이죠. 항상 상대와 같은 입장이 돼서 ‘경청’과 ‘공감’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영 의원을 칭찬합니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여성 창업자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벤처·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사가 많아 행사에서 자주 뵙는데, 선배 여성 창업자로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창업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공감도 많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혁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장애인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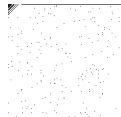
이중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애인 복지 전문가인 이중성 의원은 한국지체장애 인협회에서 26년 동안 일하며 사무총장을 지내다 제21 대국회에 입성했다. 보통 장애인 단체 대표를 비례대표 로 영입하던 시절, 실무자였던 그의 등장은 신선한 바람 이었다.

이중성 의원은 생후 6개월 때 앓은 소아마비의 후유 증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한다. 가족들은 아기가 감기를

앓는 줄 알고 감기약만 먹였다고 한다. 동네가 시골이라 큰 병원이 없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그는 만 1살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장애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 끼진 않았다. 형제도 많고 다복한 편이었다. 초등학교 시 절 4~5km 거리를 어머니가 업거나 아버지가 자전거에 태워 다녔다”고 회상하며 “힘든 것은 중학교 입학 무렵



이었다. 중학교는 읍내에 있어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는 고민한 끝에 ‘살 길은 공부뿐’이라며 그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감행했다. 과학자의 꿈을 키우던 그는 이과인 공대에 진학하려다 생각지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대학에 원서를 내려고 가보니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험 실습이 힘들다며 이공계열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처음으로 겪은 장애인 차별이었습니다. 원서를 내보기도 전에 탈락한 것이고 거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의원은 인문계열로 바뀌 회계학과에 진학했다. 회계업무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무렵 다시 한 번 한계에 부딪혔다. 학교도 괜찮고 특성화된 학과라 취업이 잘되는 편이었지만, 그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계속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후 장애인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취업한 그는 26년간 협회에서 일하며 7년간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그중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해 애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 증진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는 ‘장애인 당사자 주의(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장애인 운동)’와 ‘정치 세력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 1998년 설립한 장애인의회정치대학 출신의 장애인들이 지방의회에 도전하거나 당선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장애인에게 보탬 되는 정책 만들 것

제21대국회 총선을 앞두고 그는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정치권 영입을 제안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상징적인 인물보다 현장 경험이 있는 젊은 실무자를 원하고 있었다. 점진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보니 모든 정책에는 각기 다른 입장이 있어 조율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는 “특히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 쟁점은 많지 않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 세심하게 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활동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무 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건물, 은행,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정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가는 집 앞 편의점, 약국, 우체국에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과 사회 활동 참여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화재나 지진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피난이나 대피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장애인에게 더욱 취약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포부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직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정정보다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 김영선 사진 유윤기

‘탄소중립’, ‘서민금융’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일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법률가들의 감시와 견제 밖에 있었던 에너지 문제, 그중에서도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박진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맡았고, 류권홍 에너지환경법센터장이 ‘탄소중립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권오현 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 ‘에너지전환 비용과 국민 부담’을, 유인호 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이 ‘탄소중립 거버넌스와 적법절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12월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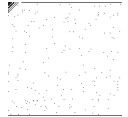
2021년 5월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도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김상희·윤호중·김민석·홍익표·이재정·강선우·고민정·고영인·김남국·오영환·이탄희·장경태·조오섭·허영·홍정민·신현영·전용기·최혜영·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2월 6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체벌을 용인하는 근거 조항으로 사용하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올해 삭제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관점에서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짚어보



고,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과 부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위원회 백혜빈, 김예린 위원이 아동 입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개념과 훈육에 대한 차이점을 발표하고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강귀숙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심지원 '100인의 아빠단' 단원, 정동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이 참여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아는만큼 보이는 게임, 리터러시를 주목하라’ 세미나

게임 리터러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아는만큼 보이는 게임, 리터러시를 주목하라’ 세미나가 12월 7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 속 향유 콘텐츠가 된 시점에서 게임 리터러시의 가치에 다시금 주목해 게임 리터러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게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게임 콘텐츠를 넘어 보는 게임, 만드는 게임, 삶과 연결되는 게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게임을 바라보고 이에 대해 소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양은 서강대 교수가 발제를 맡은 가

운데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김상순 서울시립대 교수, 진예원 전 라이엇게임즈 PD 등이 게임 리터러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8일 ‘건축물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비화재경보 대책 모니터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화재 때마다 단골 이슈로 떠오르는 소방시설 차단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잦은 비화재경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정부의 비화재경보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부의 ‘비화재경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시국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서병근 존슨컨트롤즈코리아 그룹장, 안현성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김성한 소방기술사, 박수진 소방시설관리사,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19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12월 10일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코로나19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19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1부는 조선진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의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사회적·의학적 지표 연구’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방수영 노원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 시대 석유 유통 산업의 혁신과 상생 방안’ 토론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2월 13일 ‘에너지 전환 시대 석유 유통 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 공동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석유유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인 ‘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

선 방향’과 제2주제인 ‘수송에너지전환과 주유소 혁신·상생발전 방안’으로 나눠 기초발제와 패널토론을 각각 진행하고 이어 참석자 전체가 플로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주유소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인구 감소, 3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 토론회

서범수·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12월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인구감소, 3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재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과 김종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 서기관,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 5명이 발제를 맡아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석필 충남 저출산보건의복지실장, 박용락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이 참여해 지방도시들의 현실과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

정리 윤성혜



국회 본회의, ‘영아수당 지급법’,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등 의결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위생을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새로운 창업 경향을 반영해 35년 만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또 국회는 12월 9일 2021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07건을 포함해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대장동 사건 후속법’, ‘LH사태 후속법’ 등 부동산 시장 건전화 법안,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국회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군(軍)내 성 비위 등 군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군지휘부 또는 군사법 당국이 사건 은폐 시도 또는 봐주기식 수사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 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입회요구권을 신설했다.

또 군인 등의 국가인권위 진정 요건을 완화하고 수사 기관의 장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됨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성비위 등 군 인권침해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은 최근 LH사태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했다. 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해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하고, 몰수·추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돼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8월 임시회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법원의 판사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경과 조치를 두어 2021년 현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으나,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판사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현재 적용 중인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규정 적용 시기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유예하도록 했다.

또 판사 임용에 성별, 연령, 법조 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을 통해 판사 충원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3년간 약 249명의 판사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개별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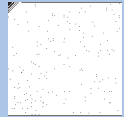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광고·판촉 행사를 강제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규정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미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시에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이를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권자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격차 등으로 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부족하며, 하도급 계약의 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관행적 불공정 행위들이 빈번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포함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공기업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자 등 입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설날·추석 등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

의 범위를 현행 규정에 비해 그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선물 가액 범위를 늘림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농어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2022년 7월 1일 이후 시행).

이번 개정으로 양도 주체에 대한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이 어렵고, 통관업을 시작할 때 관세청장에게 등록하고 관할 세관장 등에게 다시 개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관세사의 개업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 절차로 일원화했다. 또 관세사 시험에 관해 고의로 방해



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관업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개업신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청 고시와 시행령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주류면허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세청 고시와 시행령에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율하도록 했다.

또 주세 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시나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상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원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어 급식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납품되던 농산물의 수요가 급감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등 학교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가계와 생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학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학교 등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학교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



고, 교육시설 디자인 시 감염 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 등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확보, 감염 예방 기법을 적용한 학교시설 디자인으로 교육 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저금리 전환대출 기회 제공 필요성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2012년까지 기 대출자에 대해 저금리 전환대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2010~2012년 고정금리(3.9~5.7%) 학자금대출을 2.9%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지원 대상에 포함해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 및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공개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성별 등 특성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이 제고되고, 수행과 관리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며,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뇌연구자원의 특성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의 수집·보존, 뇌연구자원의 이용·제공 등 뇌연구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뇌은행 운영, 뇌연구자원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 향상, 연구효율 증가 등 국가 뇌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자의 생존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실시공 및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중소기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중소기업자를 육성·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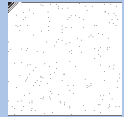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비대면 사회의 핵심 기반 정보처리체계로서 보안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한 인증제도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및 이용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수요를 촉진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하고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 신뢰성을 제고하며, 국가기관 등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보호자를 통해 무연고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자 선정 및 긴급 연락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화유지활동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 계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퇴교 처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품행이 극히 불량한 사관후보생 등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3월 2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간의 연구를 통해 정리된 보상금 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애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의 대형화·복합화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재난안전기술·재난안전제품의 정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지정·제품 인증 및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사업화 및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7년 연장하고,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화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 발전, 영화인의 복지 및 고용 등에 기여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예상 진료 비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해 게시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도 표준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및 진료 선택권이 강화되고, 진료 분류체계의 표준화에 따른 동물건강보험 시장의 발전이 기대되며 과잉진료 및 과다진료비 청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어업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어업규제를 일부 도입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산업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 방대한 범위 등 특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부족해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정됐다.

법안은 산업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도 규정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 데이터 활용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유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현행 평가체계를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바우처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7세에서 8세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수당 연령 상향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

키는 행위를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해 간접적인 폭력을 당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고 자격상실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며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를 통해 결격사유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해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죄의 경합 여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돼 이를 바로잡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

자 수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 향상과 원활한 직업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고, 또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3년까지 약 430여 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의무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리 고영선

국가 재정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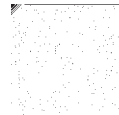
지난 2003년 당시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관리제도는 예산편성·집행 등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목표관리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화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결과 위주의 성과관리가 어렵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단순 실무적인 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나 인센티브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제도 자체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목표관리와 책임성·전문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대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리고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부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지난 정

기국회에서는 정부 제출 법률안이 일부 조정·반영되어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성과목표관리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성과목표관리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 실시로, 기존 1천700여 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과목표관리를 400여 개의 프로그램 대상으로 개편해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내 ‘오염원 관리’나 ‘정책 기반 강화 및 국제협력’ 등 단위사업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자체의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추진체계 구축으로서, 각 부처의 차관 등을 '재정성과책임관'으로, 기획조정실장 등을 '재정성과운영관'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별로 담당 실·국장을 '성과관리담당자'로 명시해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제도개편 내용에는 셋째, '국가재정법'상 법적 근거 체계화 및 성과관리 관련 사후조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성과목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된 성과관리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안 심사 관련 주요 논의 사항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던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를 삭제하는 대신, 제4장의2(성과관리)를 신설해 성과관리제도의 개념·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을 비롯한 종합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장(章) 신설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규정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최근의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실시됐다.

먼저, 종전에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실시하던 성과목표관리를 프로그램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성과관리가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프로그램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개별 단위사업의 실적이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성과지표의 개수뿐 아니라 그 다양성과 구체성이 대폭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관리를 실시하더라도 성과목표·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업을 단위로 하는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 단위로의 개편 등을 시작으로 두 제도의 중복성을 지속 완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안 편성·심의와의 연계 문제나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사업의 성과목표관리 문제와 같은 개선과제가 남아있다. 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부처 소관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등 여러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새해부터 개편·시행되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코로나19 이후 미 연준의 긴급 통화정책과 미 의회의 대응

2020년 3월 5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발생 이후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3월 19일 확진자 1만 명 돌파, 3월 26일 사망자 1천 명 돌파 등 2020년 초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미 연준(Federal Reserve)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유례없는 큰 폭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3월 한 달 안에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미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대형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중점 지원 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미 의회는 이번 연준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 시행을 법적으로 신속히 뒷받침(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하면서도 동시에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한 제한조치를 마련했다. 또 연준의 통화정책 시행 이후에도 연준 총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 그 시행 성과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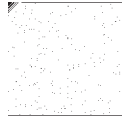


김경신

워싱턴 주재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미 연준의 긴급 통화정책

2020년 3월 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미 연준은 큰 폭의 시장안정 조치를 3월중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긴급 FOMC 2회 개최를 통한 제로금리 시행,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완화(국채·MBS 매입) 도입, 회사채/CP/MMF/ABS 등의 매입을 위한 긴급 대출프로그램 도입,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4개국(한국 포함) 통화스왑 등이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도 3월 미 연준의 긴급 통화정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금리 인하	긴급 FOMC를 개최하여 50bp + 100bp 금리 인하	3.3, 15
할인창구 이자율 및 지급준비율 인하	예금기관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할인창구(Discount Window)를 통한 대출이자율을 0.25%로 인하, 지급준비율 0%로 인하	3.15
양적완화 재도입 및 5개국 통화스왑 개선	국채 5,000억\$ + 모기지 증권 2,000억\$ 매입 결정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스위스와 통화스왑 개선	3.15
감독 규정 완화	금융기관의 capital buffer(원충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 위기 대응에 활용할 것을 권고	3.17
기업어음 매입	민간기업어음기구(CPFF) 재도입 (재무부 100억\$ 보증)	3.17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 지원	국채, 지방채 등을 담보로 MMF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대출자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재무부에서 기금 제공)	3.18
9개국 추가 통화스왑	한국, 호주, 브라질 등 9개국과 추가 통화스왑 발표	3.19
Commeric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SPV를 통해 기업어음(CP) 매입	3.17
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MMIF)	SPV를 통해 MMMF 보유 CD, 은행채, CP의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	3.18
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PMCCF)	SPV를 통해 신규 발행되는 회사채 및 대출채권 매입	3.23
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MCCF)	SPV를 통해 유통중인 회사채 및 대출채권 매입	3.23
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ALF)	SPV를 통해 非모기지 소비자금융(Consumer Loan)과 연계된 ABS 담보 대출 실시	3.23

자료 : 주미대사관 경제주재관실

특히 미 의회는 금융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연준의 긴급대출제도(Emergency Lending Program)¹⁾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주·지방 정부 및 중소기업 등에 보다 포괄적인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증재원 예산으로 4천540억 달러를 책정해 통화정책 측면에서 4조 달러 이상의 긴급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신속히 확보해주었다. 당시 미 회사채 총 발행액은 9.6조 달러, 기업신용규모는 총 15.8조 달러 규모였으니, 충분한 긴급 유동성 공급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실제로 3월 27일 미국 정부가 3차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한 코로나 종합지원법안인 케어스 액트 통과 직후 미 회사채 평균스프

레드(OAS)는 3% 이하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긴급 대출프로그램 관련 미 의회 입법과정에서 강화된 제한사항

미 의회는 피해산업, 주·지방정부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긴급 대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보증재원 예산 4천 540억 달러, 항공업계 대출지원을 위한 예산 460억 달러 등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미 재무부 비상금융지원(Emergency Relief & Taxpayer Protections) 예산을 코로나 종합지원법안인 케어스 액트에 최종 반영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대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재무부가 운

1) 1932년 대공황 직후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13조 3항에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Emergency Lending Program을 처음 도입·시행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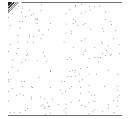
영한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와 연준의 긴급대출제도인 6개의 Facility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긴급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이후 대형금융기관 및 대기업만을 중점 지원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0년 Dodd-Frank Act에서 향후 연준의 긴급대출제도 운영 시 특정회사 자의적 선정 금지(기준에 의한 Broad-based Eligibility), 사전에 손실보전장치 마련 등의 제한조치가 입법화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케어스 액트를 통해 입법화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상·하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08년과 차별화된,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화된 대출지원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첫째, 케어스 액트를 통한 금융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산업(Severely Distressed Sector)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시 대형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실자산 매입과는 차별화됐다. 둘째, Broad-based Eligibility에 입각해 지원기업의 자의적 선정을 방지했는데, 특히, 법률에서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재무부의 재량을 축소했으며 대통령, 의원 및 친인척 관계사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Conflict of Interest). 셋째, 지원 대상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이전 고용수준의 90% 이상 유지, 지원 기업의 채무면제 허용 금지, 임원보수 인상 및 고액의 퇴직금 지급 금지, Buyback

및 배당 금지 등이 그것이다. 넷째, 의회에 의한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이 상원과 협의해 임명하는 특별감독관(Special Inspector General)을 설치해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의회 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하원의장, 상·하원 다수당대표, 상원소수당 대표, 하원소수당대표가 각각 추천하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금융지원을 금지시켰는데, 특별한 법률 개정이 없는 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존 대출 변경 및 행정비용에만 지원토록 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은 자금(상환포함)은 재무부 일반회계로 이전해 적자보전에 활용토록 했다.

청문회 개최를 통한 긴급 통화정책 성과 점검

미국 상원과 하원은 2020년 3월 27일 케어스 액트 통과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준의 대출프로그램을 포함한 긴급 통화정책 시행 전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3월부터 추진된 제로금리 수준의 정책금리 운용, 양적 완화, 그리고 긴급 대출프로그램은 금융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과 가계, 기업 및 지방정부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신용흐름을 지원하는 등 1조 달러 이상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어, 기업 등의 영업정지를 방지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해 근로자가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출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 중 1천950억 달러만 소진되고 상당액의 미소진 예산 2천590억 달러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컸지만,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온라인 판매 호조 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대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준법 13조3항(긴급대출제도)과 케어스 액트에 의거 설치된 총 9개의 긴급대출프로그램 중 2021년 6월말까지 재연장된 소상공인 PPP대출 Facility를 제외하고 각각 2020년 12월 31일(5개), 2021년 3월 31일(3개)에 종료됐다. 따라서 의회는 연준 및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말 이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은 금융지원보다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계와 근로자들을 중점적으로 타게팅한 보조금 방식을 통한 재정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바이든 당선 이후 미국의 5차(2020. 12월) 및 6차(2021. 3월) 코로나19 극복 대책에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크게 반영됐다.

2021년 상반기 이후부터 의회의 코로나19 관련 청문회는 긴급대출프로그램에서 연준의 초안화적 통화정책인 제로금리, 양적완화 지속 여부,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Pent-up Demand(억눌렸던 수요), Supply-chain Disruption(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의 혼란) 등을 통해 야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대응 점검 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지게 됐다. 한 예로, 최근 11월 30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깊고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증언했으며, 연준(FOMC)에서의 테이퍼링 가속화 및 이자율 인상 시기 조정이 큰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

평가 및 시사점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시에 도입되는 긴급 대출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인 재정으로 보전되는 바 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제한과 통제는 입법과 주기적 성과 점검 등으로 충분히 작동되고 있으며, 의회의 통제와 비판을 통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설계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금리 및 양적완화 등 연준의 고유한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주기적 청문회를 통해 그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 및 논의가 미 의회를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책임성 있는 통화정책 수립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2.19.]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11월 말 기준 25억3천만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이다. 과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이었다던 2019년 연간 실적 25억1천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수산식품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했다. ‘수산식품산업법’의 제정 이유와 내용, 성과 및 보완점 등을 알아봤다.

‘수산식품산업법’은 지난 2020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2월 18일 공포, 2021년 2월 19일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수산식품산업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가공기술은 첨단화되고, 기능성 식품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

식품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농해수위는 설명했다.

2025년까지 관련 산업 고용 5만 명,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 실현 계획

‘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

상,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 향상과 소비 확대 △해외시장 진출과 전후방 산업 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조 원 △수산식품 산업 고용 5만 명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74.4kg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전남·부산권역)와 지역별 중·소규모 거점단지 6개소를 조성한다. 또, 수산물 소비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산식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대체 수산물과 인공배양 수산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전통 수산식품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제품의 구매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K-Seafood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기능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 기업 간 계약생산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이은화 사무관은 “신제품 및 기술투자·개발 등 자발적 성장이 어려운 영세한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연구소 등과 협업(연구자 1:1 매칭)해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는 부산과 목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 해양식품공학과 김진수 교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정 간편식(HMR)의 성장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가정간편식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글 박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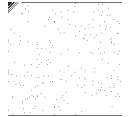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1-11-25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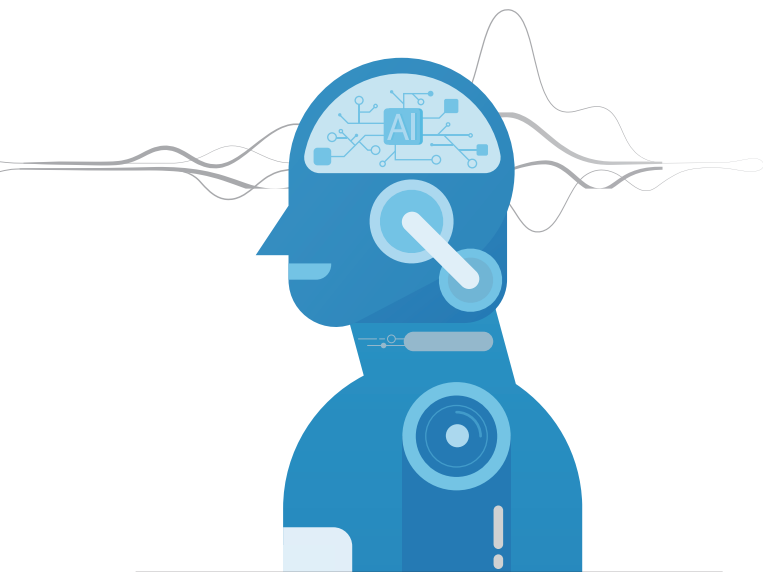
2021-12-02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메타버스 세상에서 ‘오디오’의 미래를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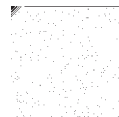
AI·메타버스 오디오 전문 기업 ‘가우디오랩’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찾아가는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를 신년부터 연재합니다. 1월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 R&D 전담 연구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고성능 AI 음원 분리기술 등을 갖추고 짧은 기간 내에 5건의 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성을 증명했다”고 추천한 ‘가우디오랩’을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신기술·신사업을 한발 앞서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뜨겁다. 이 가운데서도 AI·메타버스 오디오 전문기업 ‘가우디오랩’은 주목할 만한 회사다. 2015년 설립된 ‘가우디오랩’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VR&AR챌린지 대상’을, 2017년 영국 VR어워드에서 ‘올해의 최고 VR 혁신 기업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창업 이래 현재까지 72건의 특허를 출원해 32건의 등록특허를 확보했을 만큼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했다.

‘가우디오랩’의 AI그룹장 전상배 최고과학책임자(CSO: Chief Science Officer)는 최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열풍 속에서 오디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마치 내가 그곳에 가 있는 듯한 착각’(Being there)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리도 실제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공간음향 기술로 가상세계를 현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음향공학 박사이자 20년 경력의 오디오 기술 연구자인 그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해 11월 시상한 ‘IITP 우수과제·연구자 시상식 및 성과 교류회’에서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가 이끄는 ‘가우디오랩’ AI그룹은 고성능 AI 음원 분리 기술 GSEP(Gaudio Source Separation)를 개발했다. 음원분리란 영화에서 배우 목소리만 추출하거나 음악에서 특정 악기 소리만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전상배 CSO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분리도 지표인 SDR(Signal



to Distortion Ratio)을 세계 대형 경쟁사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의 GSEP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며 “압도적인 분리력, 현저히 적은 연산량, 월등한 음질 등 3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가사·자막 동기화 솔루션인 GTS(Gaudio Text Sync) 기술도 선보였다. 그동안 음원에 따라붙는 가사는 곡마다 사람이 직접 음원 시점과 가사를 일일이 맞춰가며 작업해야 했다. 하루에 발매되는 곡의 수가 수만 곡에 이르는 음원시장에서 수작업으로 모든 곡에 싱크 가사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GTS를 사용하면 서버 1대로 1곡당 5초, 하루 약 7만 곡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가우디오랩 측은 설명했다. 이 기술은 현재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 B사의 서비스에 적용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과 구분 어려운 정교한 소리 구현

‘가우디오랩’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가우디오랩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헤드셋만으로 현실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소리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바이노럴 렌더링’(Binaural Rendering)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에 맞게 음원의 위치와 거리는 물론 현장 공간의 특징까지 재현하며 몰입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기술력을 앞세워 가우디오랩은 작년 하반기 네이버 등 여러 회사로부터 113억 원의 투자(Series B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가우디오랩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지만 음향



음원 분리기술 GSEP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가우디오랩 전상배 CSO.

공학박사 7명을 포함한 20여 명의 오디오 전문가 등 ‘사운드 장인’들이 포진해 있다. 전상배 CSO는 “소리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덕업일치’(德業一致: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직 재즈가수, 작곡가 출신 연구원, 대학 때 밴드를 했던 직원들 등 음악과 오디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소리 연구’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가우디오랩’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할리우드 대신 한국 시장을 먼저 잡고 싶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VR(가상현실) 시장 진출을 위해 할리우드에 진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대한민국이 메타버스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와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한국에 있다는 설명이다. 전 CSO는 “이제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 오디오 시장을 정복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국회,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12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소관(정보위 제외) 58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등 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천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요구사항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 유형별로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천197건이 채택됐다. 징계 요구 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건 등 2건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는, △작년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당시 직원용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 △세종시 신축 청사 입주가 무산되었음에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사례를 계기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고 그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등 총 4건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중배 위원장은 “올해 결산 심사는 맹성규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예년보다 많은 7차례에 걸쳐 개최됐고,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도 전년 대비 10% 이상 많이 채택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 취지를 살려 시정요구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예산 집행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및
농림 분야 공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2월 9일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양수산 분야 공청회는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이현동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 연구실장 등이 발제하고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서봉춘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상무, 김성호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나승진 한국 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어민수당 보조, 맞춤형 복지지원, 수산업 핵심 인력의 국가책임 양성, 외국인 종사자 규모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산업차원에서의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이행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외에도 △어촌어항재생, 내륙어촌지역으로 맞춤형 전략 추진 필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어업·농어촌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퇴직연금제, 경영이양직불금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인구를 어업인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2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분야 공청회를 실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박현 국립 산림과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한국임업인 총연합회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 및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확충 △소득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 등에 관한 의제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산림 자원 순환경영 체계 구축 △산림산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에 관한 의제가 산림분야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위원들은 청년농 유입정책, 농업인 소득보장, 농업인 정년제 도입, 농업인 연금제도 강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농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연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공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2월 1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과 허위·조작보도 정의의 모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전문가 간 견해가 엇갈렸다. 채영길 교수



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의 의미보다는 시민들의 언론의 불균등한 권리를 평등하게 만들자고 하는 집단적인 요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 인격권 피해구제 대상 매체를 유튜브 브나 구글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반면, 권오현 변호사는 “‘허위·조작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 금액에 상당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교수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입해서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명예훼손 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클 수 있으나 피해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작다”며 “정정과 반론 제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열람차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21일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 논란과 관련, “포털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했을 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검증할 필요는 있다”며 “알고리즘의 기본 골조는 공개하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에 뉴스 편집 권한을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해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는 “포털도 그래서 아웃링크(포털 내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 또는 구독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지역 언론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지역 언론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충분히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NEWS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열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2일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텃밭을 통해서 여야 의원 60명이 함께 노력을 했다. 이런 우정이 의정 활동에도 함께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농부의 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생생텃밭동호회는 국회 안 생생텃밭에서 가꾼 농작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는 의원모임이다. 국회생생텃밭동호회 회장인 이상호 의원은 “농업과 농촌이 살고 농민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취지의 행사”라며 “그런 마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등이 함께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결핵협회에 성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7일 의장집무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기부문화가 우리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리면 좋겠다”며 “국가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기



부가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훈훈해진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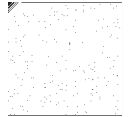
조 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모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라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모금 비결 등에 대해 놀라워하며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금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나눔문화 관련,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대한결핵협회에도 성금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결핵환자가 많은 편인데 결핵의 퇴치를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열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8일 국회의사당 분수대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성탄트리가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등불이 돼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트리의 불빛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의 원들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또 화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점등식에는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신생명나무교회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8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의장은 수여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회를 조금 더 전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데 이해충돌이 없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노동일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노동일 신임 위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해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차동연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한재필 송실대 국제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 수상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월 1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면서 “존철살인(寸鐵殺人)이 아닌 존철활인(寸鐵活人)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

NEWS

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사회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병철 선플재단이사장은 “청소년의 눈으로 청소년이 어른에게 상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특히 선거철 악플이 난무하는데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심판받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게 상을 직접 수여한 박진표 학생은 “청소년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의장님께 상을 드리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국회,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작품전 ‘전통을 전하다’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2월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으로 한국전통문화대(총장 김영모)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생 작품전 ‘전통을 전하다’를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통미술공예학과 재학생(4학년) 28명이 제작한 전통조각·전통 도자·전통섬유·전통회화 등 전공별 졸업 작품 36점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한국전통문화대 졸업작품전을 오프라인으로 전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의 4년간의 결실을 국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되고 있



는 모습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미래가치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전 ‘전통을 전하다’는 12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김예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28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됐다.

국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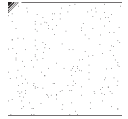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2021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협약을 체결한 국회사무처는 12월 17일부터 국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개통했다.

‘2021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은 과학기술방송통신부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국민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임을 고려해 사업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될 서비스 구역은 국회 잔디광장, 의원동산, 국회운동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서비스 수요 및 음영지역 조사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간 차관급 정례회의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2월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화상회의로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2006년에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상호 초청·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의 법제지식과 입법정보를 폭넓게 교류해왔다. 이번 화상회의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중국 측 방한이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된 것으로, 중국 측에서는 쉬안바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부주임(차관급), 장구이룽 법제공작위 행정법실 일급순시원(국장급) 등 5인이,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 오창석 법제실장, 김영일 정치행정법제심의관 등 5인이 참석했다.

전상수 입법차장과 쉬안바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비교’를 주제로 우리 측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과 중국 측 장구이룽 행정법실 일급순시원이 양국 행정입법의 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양측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 속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의회의 행정입법 심사절차,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세법상 행정입법 통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고, 추후 관련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전상수 입법차장과 쉬안바오 부주임은 10여 년 넘게 이어온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의 교류와 이번에 최초로 열린 화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건실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지속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의 활발한 입법정보 교류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저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명우 제23대 국회도서관장 취임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12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국회도서관 신임 도서관장(차관급)에 취임했다. 이명우 신임 관장은 앞서 12월 3일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바 있다.

제23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된 이명우 관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를 졸업,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취임식에서 이명우 관장은 “의회도서관으로서 국회 의사결정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과

NEWS

국회예산도서관 2월 개관을 맞이하는 2022년이 그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다음 70년 준비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국회 의정 지원기관으로서 최상의 의회도서관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도서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관운영 방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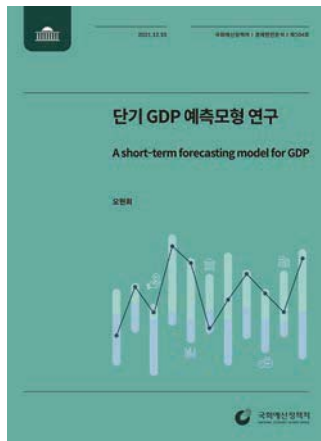
국회에산정책처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 발간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거시경제 전망모형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단기 GDP 예측모형 연구'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예측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통화·재정정책

정상화, 자동화 및 ESG 경영 본격화,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 등 다방면에서의 구조 변화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내외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중요하며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실질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GDP는 매 분기 실적치가 시차를 두고 공표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월별자료를 이용해 단기 GDP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비교적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26개 월별자료를 이용해 주성분 분석 및 동태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단기 GDP 성장을 예측모형을 구축했다. 예측 방식, 예측 기간, 전망 모형별로 예측 성과를 비교해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분석 결과 본 모형은 기존 분기모형에 비해 예측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월별자료를 이용한 전망모형이 예측력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발표 전에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을 생성해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뢰성 있는 예측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유엔사회개발연구소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와 12월 10일 영상회의를 통해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염병 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기술 활용 등 국제협력에 필요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회조사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국제적 연구기관



인 유엔사회개발연구소가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약속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유럽의회조사처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간담회 개최 등의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10번째 사례가 된다.

양 기관은 향후 ① 연구주제·방법의 공유 및 공동연구, ② 조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③ 상호 네트워크 활용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만홍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서 2021~2025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변혁적 사회정책, 젠더 정의와 발전, 변화를 위한 대안 경제, 환경 및 기후 정의, 연구성과의 정책 구현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테마”라면서 “공동 관심 사안이 많은 양 기관이 향후 정보 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참여,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 상호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보고서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간사 역할로 참여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위)가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고 성과 확산 계획을 논의하는 종합보고회를 12월 8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아젠더위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도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나라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사회



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젠더위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종합보고회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국내 석학들의 지혜를 모은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경룡·정해구·김복철 공동위원장 등 아젠더위 위원들과 국회미래연구원의 김현곤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 가능한 아젠더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젠더위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됐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이 간사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

“국회방송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회방송 채널번호 단일화 성과와 의의

“국회방송은 채널이 몇 번인가요?”

국회방송에 근무하면서 외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었다.

“집에서 방송을 뭐로 보시나요?”

“방송이요? TV로 보죠.”

“아뇨. TV 시청을 IPTV로 하느냐, 아니면 위성방송이나, 지역케이블이나를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IPTV인가봐요.”

“그럼 SK인가요, KT인가요, LG인가요?”

국회방송의 채널 하나 알려주는 일이 마치 스무고개처럼 이어져야 했다. 특히 지역케이블로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잡다양해서 솔직히 나도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플랫폼별로 번호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100번대, 200번대, 심지어 300번대로 넘어가다 보니 국회방송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랬던 국회방송 채널에 최근 ‘드디어’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16일 LG유플러스가 국회방송을 172번에서 65번으로 조정했다. 전국 IPTV 국회방송 채널이 65번으로 단일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IPTV는 65번, 케이블 TV·위성방송은 165번으로 국회방송 채널번호를 단일화하려는 계획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전국 유료 방송 시청자의 80% 이상이 65번 또는 165번으로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개국해 2021년 18주년을 맞은 국회방송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된 뜻깊은 ‘사건’이다.

국회방송(NATV)과 국민방송(KTV), 방송대학TV(OUN) 등 3개 공공채널은 원래는 낮은 채널대역(2~25번)에 있었다. 그러나 2011년 4개의 종합편성 채널 개국과 함께 진행된 채널번호 조정에 따라 이들 채널들은 가깝게는 90



임광기 방송국장



번 후반대, 멀게는 200/300번대로 밀려났다. 시청률 역시 곤두박질쳤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별로 채널번호가 각각 무질서하게 배정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채널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고, 국회방송은 ‘채널을 돌리다가 어찌다가 보게 되는 채널’로 전락했다.

아무리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시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방송 채널접근성 저하는 결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SNS 등 사회가 소통하는 방법은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치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언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IPTV는 65번, 나머지는 165번으로 통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취임은 변화의 물꼬를 텄다. 국회방송에 대한 박 의장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이 채널번호 조정에 힘찬 동력이 된 것이다.

당초에는 모든 플랫폼의 채널을 65번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IPTV를 제외한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100번대 이하 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다는 플랫폼사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IPTV는 65번, 나머지는 165번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플랫폼 사업자와 채널번호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65번은 ‘365일 일하는 국회’에서 착안한 것으로 ‘상시국회’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자는 의미다.

사실 채널번호 조정은 홈쇼핑과 광고 등 각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였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 임원 및 실무팀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방송과 자주 비교되는 국민방송(KTV)의 경우, 일부 IPTV에서는 국회방송과 함께 인접 채널번호(64번)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지만, LG유플러스 채널번호 조정에는 실패해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채널번호 조정의 효과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특히 IPTV에서는 채널번호 변경 이후 시청률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채널번호 변경 전·후 같은 기간 동안(11월 16~30일)의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을 분석한 결과, 변경전 2020년 시청률 0.023%에서 2021년 0.049%로 2배 이상의 시청률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채널번호 조정은 시청자의 시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아직 번호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케이블방송사의 채널번호를 165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국회방송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 국민이 65번 또는 165번으로 국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방송은 ‘국민을 국회로, 국회를 국민에게’라는 모토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과 국회 간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해
최고의 시절로 기억될 것

김민재 입법조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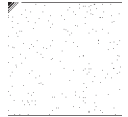
Q. 국회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학 입학 때 아버지는 법학과를 가라고 권하셨지만, CEO가 되기를 꿈꾸며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과 공부는 점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돈 버는 얘기라고만 생각했지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의미 있는 일은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면서 '법학과를 가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후회도 했습니다. 국회 본관에서 입법고시 면접을 마치고 정문까지 걸어 나올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요. 살짝 어둠이 내리고 석양이 드리우는 국회 잔디밭을 바라보니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2007년 4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배치돼 3년간 예산업무를 했고,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년간 조세법률 업무를 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장 해외순방을 담당하는 의전과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총괄팀장을 2년간 맡아오고 있는 지금까지 약 15년간 국회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Q. 예결특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A. 예결특위는 결산도 심사하지만 예산배분의 최종 단계라는 점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배분은 국회의 많은 기능 중에서도 정치 과정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차년도 예산은 정부 내에서 연초부터 8월 말까지 배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국회에서는 이후 약 3개월 간 다시 재원을 둘러싼 논의의 장이 열리고, 그 중에서도 예결특위에서는 약 1개월 간 모든 예산배분 논의를 집약한 과정이 펼쳐집니다. 예결특위



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것이 감액될 수도, 증액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예산이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늦가을의 1개월 간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 간, 집단 간, 지역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위원회 구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년마다 위원이 교체됩니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일부 상임위 전체 인원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점이 강조되는 구성이지요. 이처럼 위원장과 간사가 매년 바뀌고 위원 수가 많다보니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지원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입법조사관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입법조사관 중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총괄팀장은 특정한 부처를 담당하지 않고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에서 총괄팀장은 예산과 결산을 모두 관리하면서 논의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개별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달리, 예산·결산은 부처별 소관에 더해 국가채무 등 총량적 논의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를 아우르면서 검토보고서를 기획하고 그 방향에 따라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하지요.

Q. 코로나19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예결특위 입법조사관으로서 총괄팀장으로 있던 2020년과 2021년은 모두 코로나19로 힘들었고, 예결특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국회는 4차례의 추가경

정예산을 의결했는데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이었고,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대책이 중심이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 없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예결특위를 포함한 국회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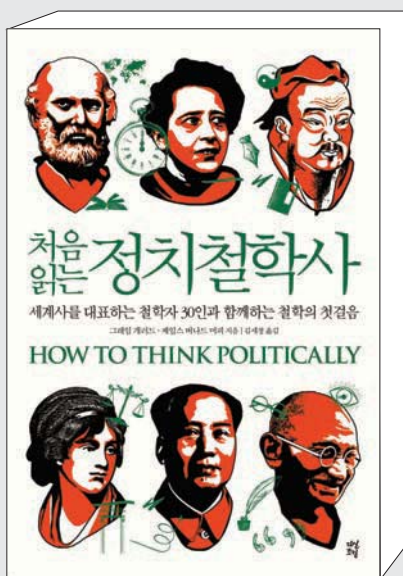
또한 본예산의 경우 2021년도 및 2022년도 연속으로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국회에서 의결한 금액이 더 컸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는 보통 정부안을 일부 순감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적게 최종 예산을 의결해왔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예비비 3조를 반영하면서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이 커졌고, 2022년도 예산안도 방역소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국회의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나중에 국회생활을 돌아볼 때가 되면, 예결특위에 근무했던 기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떠올릴 것이라는 점을 벌써부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줬던 동료들이 최고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저를 지탱했고 먹여 살렸다는 점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와 딸아이 생일이 모두 11월 말인데, 이 때가 가장 바쁜 시기라서 지난 3년간 야근하느라 축하는커녕 얼굴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때 바쁜 거야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으니 아내는 그렇다 쳐도, 딸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딸아이 생일을 가장 많이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

처음 읽는 정치철학사:

세계사를 대표하는
철학자 30인과 함께하는
철학의 첫걸음



저 자 그레이엄 개러드,
제임스 버나드 머피(정치학 교수)
역 자 김세정
출판사 다산초당
출판일 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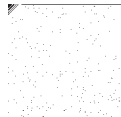
만일 출판사에서 내게 그레이엄 개러드(Graeme Garrard)와 제임스 버나드 머피(James Bernard Murphy)의 ‘처음 읽는 정치철학사’(원제: How to Think Politically)의 광고 포인트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한다면 무엇보다 ‘쉽고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주제의 무게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리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도 미분과 적분을 영화 한 편 보듯 배울 수 없듯이, 이 책 역시 독자에게 노력과 인내를 요구한다. 다만 그런 노력과 인내의 양이 그리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쉽고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사상가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다양한 삽화와 핵심 요약이 곁들여진 본문은 정치나 시사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술술’ 읽을 정도로 평이하다.

저자들은 모두 잘 알려진 해외 대학의 정치학 교수지만 이 책에서 정치철학에 대해 뭔가 큰 이야기를 해 볼 생각은 아예 접은 것 같다. 한 사상가의 생각 전반을 보여줄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철학과 정치의 관계 및 그 핵심에 있는 ‘정의’ 개념 딱 한 주제에 집중했다. 그것도 큰 글씨로 쓰인 단 일곱 쪽으로 결말짓는다. 논쟁적이지도 않으며 정교한 학설을 소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흔히 ‘따분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고대 말, 중세의 사상가나 헤겔 같은 사상가의 복잡한 주장조차 쉽게 삼킬 수 있는 케이크처럼 여겨진다.

저자들이 이런 ‘쉽게 먹여주기’ 전략을 택한 것은 이



책이 초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교수도, 기자도, 은행원도 다른 누구라도 초보자를 위한 책을 쓸 수 있다. 사람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은행 잔고를 늘리기 위해 혹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치학 교수가 초보자를 위한 책을 집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누구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치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갖기를 바랐다. 독재를 옹호하는 자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날카로운 시각을 기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저자들이 초보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정치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를 권력을 둘러싼 노름판으로 보는 태도가 마치 역병처럼 번져, 심지어는 ‘쿨’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미국)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정치혐오가 이 사회를 아래로부터 파먹고 있다. ‘정치를 혐오함’을 내세우는 야심가들이 벼락 정치 스타가 되고, 국가의 행정이 시민의 무관심 속에 관료들의 손에 내맡겨지는,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상황을 낳는다.

이러한 정치 혐오 시대의 한 가운데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저자들은 정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으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정치는 언제나 특정 집단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타협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지저분한 비즈니스”였음을 저자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를 향한 이러한 일반적인 시선은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진

실 그 자체는 아니다”(4~5쪽)라고 강변한다. 정치혐오가 만연한 시대에 이미 정치혐오에 빠진, 혹은 빠질지도 모르는 동료 시민들을 향해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저자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정치철학사를 썼다.

서술이 쉬울 뿐 아니라 다루는 사상가의 범위가 넓다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중세와 근대 및 현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서양 사상사의 레퍼토리에 유교권의 공자, 이슬람권의 알 파라비와 사이드 쿠틉, 유대교 전통의 마이모니데스, 힌두교 전통의 간디 같은 사상가들을 곁들여 부족하나마 서구 밖의 전통에도 눈길을 주었다. 마르크스, 마오쩌둥 등 사회주의 사상가들도 등장한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를 엔트리에 포함시킨 것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고려도 엿보인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마사 누스바움, 존 롤스, 아르네 네스와 현대 사상가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현대 정치이론의 전개에도 신경을 썼다.

‘들어가는 글’과 ‘나오는 글’은 특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저자들은 목표와 가치가 빠진 채 단지 권력 쟁탈전으로 전락해 버린 오늘날 정치의 문제를 비판한다. 정치는 분명히 권력을 위한 경쟁이고 싸움이지만, 적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이 책에서 풀어놓는 30인의 정치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고 저자들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이다. 🍵

글 윤비(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 날을 맞으며 어린 백성들(愚民)을 배려했던 세종대왕을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인물의 호칭을 도시 이름으로 정한 경우가 흔치 않다. 경상남도 통영시(統營市)의 이전 명칭이 충무(忠武)인 때가 있기는 하다. 임진란의 영웅 이순신(李舜臣:1545~1598) 장군의 시호로 도시 이름을 삼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의 묘호(廟號)를 따다 쓴 세종시(世宗市)는 특별하다. 우리는 누구나 세종대왕(世宗大王) 이도(李祹:1397~1450)의 한글 창제에 대해 배웠고, 더구나 1만 원권의 지폐에 세종의 초상이 찍혀 있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세종대왕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교 시절 국어 과목에서 배우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문은 입시의 단골 문제라 모두들 암기하던 글이다. 한문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나 쉽게 쓰라고 정음 28자를 만든다는 선언은 어린 나이에도 감동적이었다. 한자음의 정확한 표기를 위한 동국정운,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한 용비어천가, 둘째아들에게 시켜 엮은 석가의 일대기인 석보상절, 여러 불경의 언해, 우리의 의약재들을 모은 향약집성방, 고려의 정사인 고려사의 편찬, 태조실록·공정왕실록·태종실록 등 실록의 편찬, 과학분야의 중요서적들, 정치사의 백과사전인 치평요람, 경자자·갑인자·병진자등 금속활자의 개량, 집현전을 통한 수많은 인재의 양성. 세종의 업적은 다 셀 수도 없다.

세종은 조선의 틀을 짜고 만든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1367~1422)의 셋째 왕자다. 세 살 위의 큰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실덕(失德)으로 폐위되면서 세자가 되었고, 두 달이 지난 1418년 8월에 부군의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니 나이 22세였다. 아버지는 선양하면서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병권(兵權)은 본인이 행사하는 조건을 달아서 국정의 안정을 담보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세종의 업적은 누구나 아는 것이어서 접어두고, 세



중이 국정에 임하는 마음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록의 한 두 토목을 그대로 옮겨 본다.

주요 지방관이 임명되면 부임에 앞서 임금을 하직하는 접견이 있는데 이를 사조인견(辭朝引見)이라 한다. 아래 내용은 세종 7년(1425) 12월의 기사로 29세 때의 일이다.

△임금이 정선군지사 안수(安綏)·무주현감 유중경(柳仲敬)·김포현령 이효지(李孝智)·삼가현감 나홍서(羅洪緒) 등을 접견하고 이렇게 지시했다.

“수령이란 한 지방을 맡아 나아가 다스리는 자리이니, 그 책임이 쉽지 않다. 오늘 그대들을 접견하는 것은 그 직무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근래에 수재와 한해(旱害)가 연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걱정된다. 더구나 금년은 기후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또다시 기근이 겹칠 것 같아서 몹시도 걱정된다.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돌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愛養黎庶)에 마음을 쓰라.”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2月 8日 癸酉)

△함양군지사 최덕지(崔德之)·임강현감 박지생(朴枝生)·안음현감 김명양(金明湯)·비안현감 권후(權厚) 등을 접견하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전에는 다만 2품 이상인 수령만을 만나보고 <임지로> 보냈으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방의 먼 곳까지 내가 직접 가서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진 관리를 선발하여 나의 일을 나눠 맡도록 하는 것이니, 그대들의 임무가 가볍지 않고 본다. 그래서 이제 2품 이하의 수령도 직접 만나보고 보내기로 하였다. 금년은 여름은 가물었고 겨울은 더워서,明年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듣자니 각도의 고을에 양식이 떨어진 백성이 매우 많다고 한다. 백성을 구제할 방법을 항상 마음에 두라. 이전에는 백성들을 예의엄치(禮義廉恥)로 가르쳤지만, 지금은 의식(衣食)이 부족한 판이니 가르친들 백성들이 어느 겨울에 예의를 차리겠느냐. 의식이 넉넉해지면 백성

들이 예의를 알게 되고 형벌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나의 이 지극한 뜻을 잘 이해하고, 백성들을 안락하게 살도록 하는데(安養斯民) 힘쓰라.”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2月 10日 乙亥)

우리는 위의 짧은 글에서, 흉년에 양식이 떨어져 고통받는 백성의 구제를 주문하는 젊은 임금 세종의 고뇌에 찬 모습을 본다. 인용문에 사용된 애양(愛養)과 안양(安養)의 양(養)은 식량이나 생필품을 주어 생활을 돕는다는 뜻을 담을 때 쓰는 글자이니, 어느 것이나 곤궁에 빠진 백성들을 구휼해서 살 방도를 마련하라는 뜻이다. 접견대상 중 현감은 지방관으로는 가장 말단인 종6품관이다. 이전에는 2품관 이상의 고위 수령만 접견대상이었는데 목민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세종이 대상을 확대했고, 이 전통은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

조선의 요순 임금이라 불린 세종대왕

세종은 글을 몰라 답답해하는 백성들(愚民)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처럼, 굶주리는 백성들의 구휼을 위한 생활방도의 마련이 중요 관심이었다. 당시에 대왕을 동양의 고대 성군인 요순 임금에 견주어 조선 땅의 요순 임금(海東堯舜)이라고 불렀다는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의 기사는 세종이 약자들인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의 임금이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19의 극성으로 세 해째 모든 국민이 고통에 빠져 지쳐가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 이어서,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훌륭한 선택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고, 특히 약자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기를 대망하면서, 약자들의 편이었던 세종대왕을 기억한다. 🍵

글 신승운(한국고전번역원장)

광활한 영토 정복하고 이슬람 교육제도의 기반 세운 셀주크 왕조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 독립국 가운데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민, 즉 투르크멘인들은 돌궐 제국 소속 부족 연맹 가운데 하나인 ‘오구즈’ 투르크인들의 후예다. 이들은 11세기 셀주크(Seljuq)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국가를 이루어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북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및 터키 동남부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들의 후손 가운데 강력한 이슬람 국가였던 오스만제국의 창시자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셀주크 왕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셀주크(Seljuq 혹은 터키식 발음으로는 셀чук Selçuk) 왕조는 투르크멘(Turkmen)으로 알려진 투르크계 유목 집단의 수장 셀주크가 창시한 왕조로서, 그 기원은 돌궐 제국의 분파인 오구즈(Oghuz) 혹은 구즈(Ghuzz)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구즈는 돌궐 제국 시기 비문 자료에 등장하는 유목 집단으로 돌궐 제국 및 위구르 제국의 주요 구성 세력이었던 ‘구성철룩(九姓

鐵勒)’ 혹은 ‘구성회골(九姓回鶻)’에 소속된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구르 제국 시기 비문 자료에는 제2대 군주였던 바얀초르(Bayanchor) 카간이 정복한 여러 부족 집단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 오구즈 부족 집단은 위구르 제국의 전성기였던 8세기 현재 카자흐스탄 초원 지대로 이주해 시르다리아(Syr-Darya)강 북안에 자리잡게 된다.

잔드(Jand)에 자리 잡으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 구축

오구즈 부족 집단 소속 유목민은 카스피해 북안 볼가(Volga)강 유역에 있던 하자르(Khazar) 왕조나 중앙아시아의 사만(Saman) 왕조와 같은 인근 왕조에 용병으로 복무하게 됐다. 그 가운데 오구즈 24개 부족 중 하나였던 크르크(Qynyq) 부족의 두각(Duqaq)이라는 수령은 ‘철로 만든 활’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활 솜씨가 좋았다. 그 때문인지 자신의 아들 셀주크와 함께 하자르 왕조의 군대에서 상당 기간 복무하게 된다.

이후 셀주크가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한 것은 10세기 중엽 하자르 왕조를 떠나 시르다리아 강 중류에 위치한 잔드(Jand)에 자리잡으면서부터였다. 이 시기 셀주크와 그의 휘하 오구즈 투르크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투르크멘(Turkmen)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투르크멘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순수한 혈통의 투르크인’이라는 설과 ‘투르크인과 비슷한 자’라는 설 등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서부 투르크 방언, 즉 오구즈 방언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몽골초원에서 이주해 온 카라한(Qara khan) 왕조와는 구별됐다.

셀주크 왕조 휘하 투르크멘인들이 정치적으로 중앙아시아-이란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데에는 당시 아프가니스탄과 북부 인도를 장악하던 가즈나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결정적이었다. 셀주크가 사망한 직후에는 가즈나 왕조의 공세가 강화돼 1025년 경 가즈나 왕조의 군주 마흐무드(Mahmud)가 셀주크의 후계자 이스라일(Israil)을 생포하는 등 투르크멘을 압도했다. 1035년 셀주크의 셋째아들 무사(Musa), 손자들인 토그릴(Toghri)과 차그리(Chagri) 등은 만여 명의 생존자와 함께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에 해당하는 카스



피해 동남 연안으로 이주하도록 가즈나 왕조 측에 요청해 허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곧 반란을 일으켰고 1040년 단단칸(Dandanqan) 전투에서 인도로부터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한 가즈나 왕조의 대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토그릴은 술탄(Sultan)으로 불리며 이란과 이라크를 평정하고, 그의 동생 차그리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중앙아시아 전역을 석권한다.

비잔틴제국 와해시킨 셀주크 왕조

셀주크 왕조의 전성기는 차그리의 아들 알프 아르슬란(Alp Arslan)과 손자 말릭 샤(Malik Shah)의 치세였다. 알프 아르슬란은 비잔틴제국 치하 아나톨리아 반도를 공격하여 1071년 만지케르트(Manzikert) 전투에서 비잔틴군을 격파하고 황제 로마노스 4세를 생포했다. 이 전투의 결과 비잔틴제국은 와해됐고, 셀주크 왕조는 지금의 터키 중부 및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손에 넣었다. 또한 시리아 지방으로 진격하여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러한 셀주크의 정복은 훗날 오스만제국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전하는 토양이 됐다.

갑작스럽게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셀주크 왕조는 드넓은 제국을 통치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치 전략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높던 압바스조 칼리프(Abbasid Caliph)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세속 권력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했다. 또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발전한 문서 행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페르시아계 관료들을 적극 등용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알프 아르슬란과 말릭 샤 시기 제국을 통치한 재상 니잠 알물크(Nizam al-Mulk)다. 투스(Tus), 즉 지금의 이란 동북부 거점도시 마슈하드(Mashhad) 출신인 그는 본래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즈나 왕조의 관리 출신이었다. ‘왕국의 질서’라는 뜻의 ‘니잠 알물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그는 1063년부터 1092년까지 30년간 뛰어난 행정 능력으로 제국을 안정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셀주크 왕조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니잠 알물크의 정치적 신조에 관해서는 그가 저술한 ‘시아사트 нама(Siyasat Nama)’, 즉 ‘정치의 책’에 잘 나타나 있다. 니잠 알물크는 통치의 기본 정신을 이슬람적인 ‘정의’에서 찾고, 정의로운 군주가 되는 것이 효과적인 통치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당시 어린 왕자였던 말릭 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이른바 ‘왕자들을 위한 거울

(Mirrors for Princes)’ 혹은 ‘군주의 보감(寶鑑)’ 장르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교육기관 설립해 학생들 교육시키기도

니잠 알물크의 또 다른 업적은 이슬람식 대학, 즉 마드라사(Madrasa) 제도를 설립한 것이다. 그는 유능한 관료 및 법관 양성을 위해 1065년 바그다드를 비롯해 제국 주요 도시에 니자미야(al-Nizamiyya)로 불린 일련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당시 뛰어난 학자들을 교수진으로 채용해 학생들을 교육하게 했다. 니잠 알물크가 죽은 후에도 이 학교들의 전통이 계속되어 훗날 무슬림 세계의 고등교육을 담당한 마드라사로 이슬람 문명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셀주크 왕조는 광활한 제국을 세웠을 뿐 아니라 무슬림 문학의 발전과 교육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이슬람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투르크멘, 즉 이슬람으로 개종한 중앙아시아 출신 오구즈 투르크 집단이 세운 제국이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인들이 세계사에 남긴 중요한 발자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글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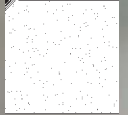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셀주크 왕조 재상 니잠 알물크의 묘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소재 킬라 코리 마드라사



남천

열핏 보면 대나무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남천죽(南天竹)이라 불립니다. 초록 잎을 바탕으로 하얀 꽃이 줄줄이 피고, 콩알만 한 열매가 늦가을에 붉게 익어 다음 해 봄까지 달립니다. 남천이 추운 겨울에 주목받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에 붉게 변하는 남천의 잎 때문입니다. 붉은 잎은 겨울 풍광의 삭막함을 씻어줍니다. 정원수로 많이 심지만 원래는 약용식물이라고 합니다. 열매, 잎, 줄기, 뿌리 모두 약으로 씁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24시간 본회의로 1월 1일 퇴근한 국회 직원들

2022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7.7조 원으로 법정기일을 하루 넘기고 의결됐다. 예년 같으면 여야는 예산안 수정안을 준비해 자정 즈음에 의결했겠지만 지난해에는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에 맞춰 의결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 예산안부터다. 2014년도 예산안까지는 12월 내내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의결됐다.

제19대 제321회 제4차 본회의(2014년 1월 1일) 회의록을 보면 2014년도 여야는 새벽에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의결 직후에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져 법안 처리를 마치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후 오전 9시 32분에 속개해 예산안 부수 안건을 처리하고 10시 33분에 산회했다. 새해 첫날 9시, 국회의사당 면회실에는 밤새고 퇴근하는 직원들과 새로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03시49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재석 286인 중 찬성 246인, 반대 21인, 기권 19인으로서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의 건

(05시31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의원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입니다. 먼저, 예결위 간사로서 제대로 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뉘집게나마 보고를 드려야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금액을 증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략)

의장 강창희 자, 다음은……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명을 하시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경제부총리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해명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국회가 속은 것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 답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짓이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김광림 의원 지역구지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안동에 1777억……』하는 의원 있음)

金光琳 議員 새해 첫날 예산과 기금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사실의 진실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사실상 좀 괴롭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부사업에 상임위에서 증액하지 않은 것 또 새로운 비목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5개 사업을 야당 간사와 합의를 해서 국토위에 보냈습니다.

(중략)

의장 강창희 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양당 원내대표들 의장 앞으로 오십시오.

(유대운 의원 단상에서 —다른 건이 하나 있는데 말할 기회를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하는 의원 있음)

『원내대표 지역구예요, 원내대표 지역구』하는 의원 있음)

『아니, 법도 어기고……』하는 의원 있음)

『안동 지역 예산을 내가 죽 불러 주겠어요. 안동 녹색공간 1457억, 안동 호국역사 20억, 안동민속촌 한자마을 4억 6000……』하는 의원 있음)

(중략)

의장 강창희 자, 이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곤란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51분 회의중지)

여야는 12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된 본회의에서 7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3시 21분에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정원 개혁안 등 논란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한 후 1월 1일 새벽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예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시작된 공방은 이후 예산 나눠 먹

기, 날치기 등 회의장 소란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범죄라며 정회를 요구하고, 소란 속에 정부 측의 예산안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회의는 정회됐다.

(09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략)

의장 강창희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까. 그러나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새해에는 국회가 역사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이러한 연발연시 예산안 의결은 이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2015년도 예산안부터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인 12월 2일 또는 3일 새벽에 의결됐다. 예산안 등은 11월 30일까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해도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지정되어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안은 소관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해 정부 원안으로 부의되고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안 역시 정부 원안으로 부의되고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

윤승희 서기관(의정기록2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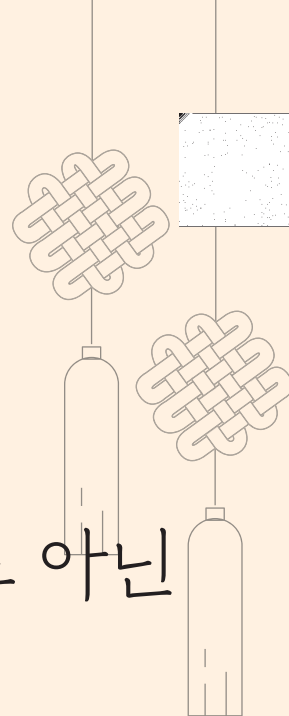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풍영루

우리 건축의 뿌리를 찾아서

누정(樓亭) - 실내도 실외도 아닌 제3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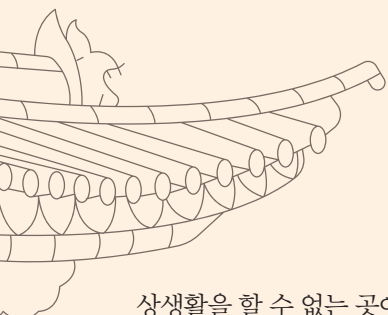
※ 새해부터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유명 건축물을 소개하는 '우리 건축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우리 건축의 뿌리와 특징을 알아보고 근 현대의 의미있는 건축물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우리 건축의 뿌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정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 우리의 모습조차 너무 많이 변했고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을 정하자. 세계화의 급류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형성한 유불도 3대 원류(原流) 사상'이 일차적 기준이 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공간 의식'을 더한 기준을 가정하자.

이 기준을 따르면 첫째 뿌리는 '누정'으로 잡는 게 적절해 보인다.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는 유불도 3대 사상 가운데 도가와 불가 사상이 먼저 형성됐으며 이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누정(樓亭), 누각과 정자를 합친 말이다. 일상에서 쓰는 쉬운 말로 '정자'라 부르자. 가장 단순한 건축 형식이지만 우리의 공간 의식과 관련해서 깊은 뜻을 담으며 뿌리를 형성한다. 누정의 공간은 묘하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며 일



상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니 실내는 분명 아닌데, 그렇다고 실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붕을 얹었고 마룻바닥이 있으며 계단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엄연한 건축물이다. 마음만 먹으면 기둥 사이에 창문을 달 수 있고 그러면 쉽게 실내 공간으로 변신한다. 그렇다면 누정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 실내도 실외도 아닌 ‘제3의 공간’이다. 공간의 상식을 깨는 이런 특이한 유형을 우리 건축의 첫 번째 뿌리로 볼 수 있다. 네 가지 근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불교의 불이(不二) 사상을 반영한다.

‘불이’란 우리가 사물에 대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가치를 부여하고 판정하며 단정짓는 ‘이분법’이 사실은 허상일 뿐이라는 사상이다. 석가가 설법한 근본 교리 가운데 ‘중아함경’에 등장하며 확장하면 분별심을 경계한 석가 사상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개념이다. 이후 ‘유마경(維摩經)’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유마경’은 설한다. “몸과 몸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몸이 곧 몸 사그라짐인지라 몸의 실다운 모습을 보는 자는 몸을 보는 것과 사그라지는 몸 보는 것을 일으키지 않으니 몸은 사그라진 몸으로 더불어서 둘이 없고 판가름이 없음일새 (중략)”라고 했다.

한국인 특유의 ‘모호함’의 미학 드러나

정자의 공간에 반영해보자. 공간을 실내와 실외로 가르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된다. 둘의 분별을 지우면 모든 공간은 실내도 됐다 실외도 됐다 한다. 정자가 바로 그렇다. 이는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의식이다. 확장하면 한국인의 국민성과 세계관의 기본을 이룬다. 한국인은 사물에 대해 단정 짓는 걸

꺼리는 성격이다. 한국인 특유의 ‘모호함’의 미학은 여기에서 나온다. 일상에서도 ‘허허실실’이라던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같은 비유어들이 많다. 요즘 한국 사회가 양 진영으로 갈려서 갈등의 대립을 하고 있지만 원래 한국인의 기본 성격은 극단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가의 천자연 사상을 반영한다.

정자는 산지가 많은 우리의 자연환경이다. 우리의 산하는 험준한 고산은 아니지만, 계곡은 깊은 편이며 실개천이 함께 발달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자연을 위협적으로 봤다면 쫓겨나야 할 공간을 만들었을 텐데 정자의 불이 공간을 만든 건 자연을 친절한 것으로 보고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세계관의 발로다. 이는 도가의 자연관과 같으며 우리의 전통 정서였다. 천자연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 고안한 공간이 정자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국 특유의 종합 감각 문화가 파생한다. 바깥 공간과 하나가 된다는 건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넘어 자연을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겠다는 뜻이다. 내 몸의 모든 감각으로 직접 느끼겠다는 뜻이다.

셋째, 한국의 전통 건축 전체 속에서 발생학적으로도 뿌리를 이룬다.

우선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짓기 쉬우니 발생학적 원형(原型)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합당하다. 이후 한국 건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건물 유형에 다 들어가 있다. 우선 대청이다. 대청은 정자 구조를 정식 건물에 이식한 공간인데 한옥을 필두로 우리 건축에서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다. 한옥 형식을 확대한 궁궐의 거의 모든 전각에도 대청이 있으며 서원과 향교의 명륜당이나 ‘동재-서재’에도 대청은 필수다.



전남 담양의 소쇄원 광풍각

다음은 누각으로 대웅전 앞 강당이나 범종각 등 사찰의 여러 곳에, 서원과 향교는 정문부터 누각을 세웠다. 성문의 문루와 성곽의 망루, 관아의 지휘소 등도 모두 누각이었다. 정자는 한국인의 생활 공간 거의 모든 곳에 파고들어 늘 우리와 함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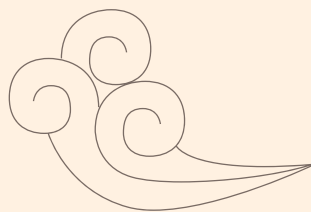
전통적 공감 의식으로 바깥과 소통해보자

넷째, 이런 배경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는 건축 형식이다.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 아파트 단지만 돌아다녀도 곧바로 정자를 만날 수 있다. 전통 건축이 사라진 현대까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건축 형식일 것이다. 이른바 ‘남산 팔각정’은 한국인에게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의 도상으로 굳어졌다. 가히 우리 건축의 첫째 뿌리라 할만하다.

2022년 한국 사회, 우리의 생활 방식을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인 폐쇄증에 걸려 있다. 세련된 최신 인터넷어와 그 속을 채우는 콘텐츠의 브랜드와 가격이 사람의 수준과 품격까지 결정짓는 단계에 와 있다. 기후 위기는 날로 악화해서 이제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집안으로 들이는 일이 해가 되는 단계에 와 있다. 모든 창을 걸어 잠그고 완전히 밀폐된 실내에 갇혀야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는 단계에 와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 의식을 꺼내어 바깥과의 소통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

글 | 사진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어머니의 산, 그 너른 품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다

‘지리산’

대한민국의 수많은 산 중에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3개 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고 큰 지리산(1,915m)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은 가봐야 할 성지와도 같은 곳, 사람들은 그 깊고 장쾌한 산세에 안겨 웅혼한 기상을 배우고 싶어 한다. 예전에는 최고봉인 천왕봉에 오르려면 죽히 사흘은 걸리는, 결코 쉬운 산행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일에 다녀올 수 있는 코스가 열리면서 오래된 소원을 푸는 이가 많아졌다. 특히 겨울 지리산은 구비구비 능선을 따라 눈꽃처럼 피어난 설경이 장관이다. 그 너른 품에 안기면 코로나19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저절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분이다.



지리산 종주길은 서쪽 노고단 정상에서 연하천~형제봉~쫓대봉~연하봉을 거쳐 천왕봉까지 이르는 약 35km의 코스로 단일 산 능선으로는 국내 최장 코스다. 능선을 따라 가다보면 마치 고요한 파도를 보듯 낮게 뻗은 산맥의 장관을 볼 수 있고, 봉우리에 서면 하얀 솜처럼 구름이 발 아래로 깔리는 천상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천왕봉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종주길은 3~4일은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산행이었다.

오늘날 하루만에 천왕봉 등정이 가능해진 것은 지리산 허리춤인 함양군의 백무동에서 출발해 천왕봉을 찍고 산청군 중산리의 산골 마을로 내려오는 최단 코스(12.3km)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백무동 코스는 하루 산행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무박 2일 코스다. 서울에서라면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해 백무동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야 한다. 자정 즈음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새벽에 백무동에 도착한다. 천왕봉으로 오른 뒤에는 반대편 중산리로 하산해 서울행 버스를 타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동이 트는 순간, 겹겹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남도의 산들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1967년 12월)로 지정된 산으로, 남한의 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천왕봉을 주봉으로 서쪽 끝의 노고단, 서쪽 중앙의

반야봉 등 3봉을 중심으로 동서로 100여 리의 거대한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20여 개 능선 사이로 계곡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리산이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깊고 넓은 품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 너른 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술한 애환을 품고 도닥여주었던 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반도 생물종의 20%가 지리산에 기대 살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나 6·25전쟁 등 국란 때마다 갈 곳 없는 이들을 어머니처럼 품어준 피난처 역할을 했던 곳이 지리산이다.

지리산의 깊고 너른 품에 안기고자 자정쯤 동서울터미널에서 백무동행 고속버스에 올랐다. 백무동은 풍수지리상으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온 신령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왕봉 여신을 받드는 무속 신앙의 근원지로 통한다. 본격적인 산행을 위해 등산화 끈을 조여맸다.

백무동-장터목-천왕봉-중산리 코스는 천왕봉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라고 하지만, 휴식과 식사시간을 포함하면 넉넉하게 9~10시간은 잡아야 한다. 또 요즘엔 새벽 산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랜턴과 등산 스틱, 우의, 보온

방풍재킷, 아이젠, 간식을 필수로 지참하는 것이 좋다.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꾸준하게 오르는 것을 권한다. 해발 500m의 출발지에서부터 약 1천400m를 더 올라야 하고 한참 어둠속을 걸어야 한다. 첫번째 목적지인 장터목대피소까지 6km의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약 3시간 이상 걷는 지루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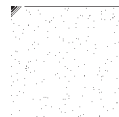
그러나 능선에 올라설 때까지 마른 숨을 헐떡이다보면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마침내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등이 땀으로 젖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어느새 동이 터오면서 저 멀리 남도의 산들이 겹겹이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비로소 지리산의 웅장함을 실감한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피곤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천왕봉 올라서니 거칠 것 없는 일망무제의 풍경

능선길에 올라서면 비교적 수월하게 산행을 할 수 있다. 주변은 온통 눈으로 덮여 설경이다. 지리산 정상 부근에는 11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고 쌓인다. 쉬엄쉬엄 오르다 보면 어느새 1천600여m를 훌쩍 넘긴 높이에 다다르고 장터목대피소에 이르게 된다.



천왕봉



장터목대피소

장터목대피소에서는 피곤한 다리도 쉴 겸 요기를 채우고 정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부터 천왕봉까지는 1.7km의 거리로 약 1시간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제부터는 지리산의 진면목을 체험하며 걷는 길이다. 천왕봉으로 오르는 길은 눈을 흠뻑 뒤집어쓴 주목과 소나무들이 나그네의 마음을 뺏는 곳이다. 능선에 올라서면 거센 바람을 버티고 선 고사목들이 그림같은 풍경을 선물한다. 또 그 너머로는 산줄기를 따라 끝도 없이 유장하게 흘러가는 연봉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 멋진 풍경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한발 한발 숨을 들이키다보면 드디어 하늘의 봉우리 천왕봉이 눈앞에 버티고 섰다. 천왕봉에서의 조망은 일망무제(一望無際)로 거칠 게 없다. 해발 1천915m, 정상에는 늘 안개인지 구름인지 흘렀다 멈추기를 반복한다. 어느덧 시야가 트이면서 장쾌하게 뻗어내려가는 산맥을 바라보니 가슴이 떨릴 지경이다.

맑고 선한 기운으로 충만한 천왕봉에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라는 표지석 문구가 선명하다. 겨울엔 쉽지 않겠지만 좀 서두른다면 천왕봉에서 일출을 만날 수도 있다. 천왕봉 일출은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수 있다’고 하니 날이 좋은 날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



등산로 옆 고사목들

지 않을 듯 싶다.

정상에서는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날이 저물기 전 하산하려면 길을 서둘러야 한다. 중산리 하산길은 무척이나 지루한 편이다. 3시간 이상도 쉬지 않고 내려가야 중산리탐방안내소에 도착할 수 있다. 내려가는 길은 더 조심해야 한다. 경사가 급하고 계다가 요즘같은 겨울에는 눈까지 얼어붙어 하산길은 더딜 수밖에 없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힘주어 내려가다 보면 종착지 중산리에 다다른다.

산 아래 세상은 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세상에라도 다녀온 것일까. 뒤돌아 지리산을 본다. ‘어머니의 산’에게 2022년 새해 희망을 기도해본다. 모두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꼭 회복되기를...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찾아가기

동서울터미널에서 백무동행 버스가 하루 8차례 다닌다.

천왕봉까지 무박 2일 등정을 하려면 자정 무렵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한다.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중점인 백무동 정류소에서 내리면 마을 뒤로 등산로가 이어진다.



흡혈귀와 ‘광견병’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괴물이라고 하면 단연 흡혈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각종 대중 예술 작품을 통해 알려진 흡혈귀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나 짐승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를 마시고, 햇빛이 몸에 닿으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며, 보통 사람보다 힘이 훨씬 강하고,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일일이 세어보는 강박증이 있으며,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건너지 못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런 흡혈귀의 특성이 사실은 광견병에 걸린 환자의 증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다.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광견병, 흡혈귀 특징과 비슷해

‘광견병’은 뇌에 염증이 생겨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병인데, 주로 개나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이 숲, 들에서 랍도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광견병 증세를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들이 사람을 물면 사람도 광견병에 감염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광견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 면에서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것들 모두가 자



세히 살펴보면 꼭 전설 속에 전해지는 흡혈귀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흡혈귀가 사람이나 짐승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를 마신다는 내용은 광견병에 걸렸을 때 사람의 공격성이 매우 높아져서 남을 공격하거나 물어뜯는 식의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는 증상과 같다.

또한 흡혈귀가 햇빛이 몸에 닿으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닌다는 전설 속 내용은 실제로 광견병에 걸린 환자들이 평소보다 감각이 무척 예민해져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마치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해가 뜨지 않는 밤에만 돌아다닌다는 증상과 같다. 아울러 광견병에 걸리면 감각이 예민해져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아 밤에도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불면증 증세를 앓는다.

그러나 광견병의 정확한 증상을 잘 모르던 중세 시대 유럽인들이 보기에 광견병에 걸려 밤에 잠을 못자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환자는 마치 햇빛을 피해서 밤에만 움직이는 흡혈귀가 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보다 힘이 훨씬 강하다는 흡혈귀의 특성도 광견병에 걸린 사람은 평소보다 공격적인 본능이 높아지고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만큼 사납고 난폭하게 굴어서 힘이 세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울러 흡혈귀가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일일이 세어보는 강박증이 있다는 민간 전승도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노이로제 성향이 강해져서 물건을 세는 것 같은 특정한 행동 양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는 점과 통한다.

마지막으로 흡혈귀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는 민담은 광견병에 걸리면 앓게 되면 정신병인 공수증을 잘 나타낸 것이다. 광견병 환자들은 물을 무서워하는 공수증을 앓기 때문에 물을 건너지도 삼키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광견병 환자들은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 증세를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유럽에서 흡혈귀의 전설이 태어났을까? 이는 유럽을 둘러싼 자연적·사회적 조건 때문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양털을 가공하기 위해 농사보다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개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 개들이 람도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동물들과 접촉하다가 광견병에 감염되고 다시 사람한테 옮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중세 유럽에서는 광견병이 흔했다. 또한 중세 유럽은 지금처럼 뛰어난 난방 장치가 없어서 가난한 서민들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 안에서 개들과 끌어안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들과 신체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개들로부터 광견병에 감염될 확률도 높았다.

현대에 와서도 광견병은 과거보다 횡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데리고 산이나 숲으로 산책을 갔다가 광견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하면 광견병에 걸릴 위험이 높으니 미리 반려동물에게 광견병 예방백신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만약 자신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린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와 상의해 광견병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 🐾

글 도현신 작가





김명희, '남북 UN 동시가입', 290x217cm, 캔버스에 유채, 1997.

인류학자로서 화가 김명희의 평화예술





가로 길이 3미터에 가까운 거대한 화면 가득한 40여 명의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을 포함하고 있다. 유라시아대륙부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기까지 백·황·흑의 인종들이 한데 모여 있다. 아이와 청장년과 노인을 아우르는 남녀의 군상은 제각각의 의상으로 각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가운데 제일 위쪽의 두 어린이가 눈에 띈다. 남남북녀다. 피리를 부는 소년의 오른쪽에는 유엔기가 왼쪽에는 한반도가 열비치고 있다. 한반도와 유엔 이미지를 배경으로 전지구인이 모여 있는 이 군상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그림이다.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는 남한과 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을 승인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 이후 46년 만에, 유엔이 창설한 지 46년 만에 각각 독립국 자격으로 유엔 회원국이 된 것이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서로의 주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서,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는 중차대한 조치였다.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지내온 세월 동안 전쟁과 냉전을 겪으면서 남북한은 각자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자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그림으로 남긴 작품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은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30년 전에 발생한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도 남

북한은 여전히 대결과 협력의 양 갈래 길을 오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남북 관계는 일방의 흡수 통일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쪽으로 변화해왔다.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기 위한 현재의 의제 또한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생 공존의 길을 여는 평화 정책의 일환이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과 체제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며 평화라는 점에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렇듯 대결에서 평화로의 점진적 변화를 만들어낸 분수령으로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김명희 화가의 그림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유엔기와 한반도 지도,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군상이라는 도상은 확연히 이 그림의 기념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미술이 종교와 정치로부터 독립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근대미술 이후에 이렇듯 국제 정치적 사건을 기념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전근대 시기까지 예술가들의 지위는 종교적 도상을 반복하거나 역사적 사건의 기록물을 제작하는 장인이었다. 종교와 정치에 예속된 예술 생산은 사건의 기록 이상일 수 없었다. 비판정신을 가지고 역사와 현실을 풍자하는 단계에 이르러 예술은 비로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신활동으로서 예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그린 김명희의 작품이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그림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예술가의 비판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 정신은 동시 가입이라는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 관점과 정치적



국회 본관 6층 중앙홀 복도에 전시된 김명희 작가의 '남북 UN 동시기합'

입장이 비판적 지식인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냉전의 유산이 채 가시지 않은 20세기 말이라는 시간대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예술가가 분단국가의 평화 의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에 유엔 동시기합이라는 사건을 다루면서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이 그림은 미술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과 전 지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유산이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김명희의 관심사는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에 걸쳐 있다.

“왜 한민족은 제 나라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만주, 사할린, 일본, 독일, 카자흐스탄, 월남, 중국, 미국 등으로 탈구(Dislocation)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지난 한 세기 우리의 역사는 가난·전쟁·정치적 폭력·문화적 뿌리 뽑힘으로 인한, 농경사회의 붕괴로 인한, 또 배고픔으로 인한 탈구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새 삶터에 던져진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뿌리내림

을 시도하면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탈구((Dislocation)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화가 김명희의 글이다. 20세기 한반도는 뿌리뽑힘의 역사였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한반도 사람들의 삶은 속절없이 역사의 물줄기에 휩쓸렸다.

김명희는 이러한 한민족의 삶에 대해 인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화가다. 겨울철에는 미국 뉴욕 소호의 작업실에, 여름철에는 강원도 춘천의 폐교 작업실에 머무는 그는 전 지구의 중심지, 첨단 문명과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산골의 삶을 오가며 현실과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을 한다. 이렇듯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그의 삶은 20세기 한반도 사람들의 운명을 비판적 성찰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기구하고 신산했던 한민족의 역사를 갈무리하는 김명희의 예술에서 보듯이, 역시 평화가 답이다. 🍵

글 김준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365일 일하는 국회 전국 어디서나 같은번호

IPTV

65

olleh tv B tv

TV

skyLife 케이블 방송

165

※ 일부지역 케이블TV는 번호상이

전국
채널번호

국회방송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송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국회방송 앱



● 소셜미디어 채널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낯선 언어 가득한 ‘공문(公文)’

나는 고등학교 교사로 공직 사회에 처음 발을 들었다. 이후 오랫동안 교육공무원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공문의 언어는 낯설기 그지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공문은 나를 크게 당황시켰다.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는 ‘시건장치’다. 시건장치를 철저히 확인하라는 의미를 알린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널리 쓰이는 말이었다. 주변 선생님들에게 여쭙어서 그것이 문단속을 잘하라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분들 역시 이 단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 일본말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건장치(施鍵裝置)를 ‘문 따위를 잠그는 장치’로 풀이해 놓았다. 지금도 이 단어는 공직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을 ‘잠금장치’로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단어를 한자어나 외국어와 같은 낯선 언어로 쓰는 것이 혹시 자기만 아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공문 언어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것일까? 수십 년 전의 일이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읽은 공문 때문이다. 연말연시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협조를 당

부하는 글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다가 여러 군데에서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면 밑줄로 표시한 ‘직무 해태·부작위’라고 하는 부분이었다. 법조계나 행정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이 단어가 왜 일상적이지 않은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지 돌아보면 일반 국민에게 얼마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앞뒤 문맥을 따져서 단어의 의미를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강의 의미만을 추정하게 하는 것으로 소통 의무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공문을 시행한 주체의 ‘직무 해태’가 아닐까 싶었다.

직무 해태에서 해태(懈怠)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한다.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혹시라도 연말연시와 선거 국면에서 오해를 받거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미이리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공문의 일차적인 목표라면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쓰는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글을 공문에 담는 것 역시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일 중의 하나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 해태, 품위 훼손 및 금품·향응 수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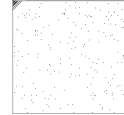
* 민생 업무 관련 직무 해태·부작위 / 과도한 음주 및 소란 등 품위 손상 행위 (아래는 생략)



2022년도 예산안 통과,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개최 등

- | | |
|---------|---|
| 12월 2일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
| 12월 3일 | • 국회, 본회의를 열고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통과 |
| 12월 6일 | • 국회,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 12월 7일 | •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개헌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12월 9일 | •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방지법’과 ‘LH사태 방지법’을 비롯해 114건의 안건 처리
• 여야,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에 검찰 비판하며 특검 촉구 |
| 12월 13일 | • 대한민국국회, 15일까지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
| 12월 16일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불법도박 의혹 인정하고 공식 사과 |
| 12월 17일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수상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
• 박병석 국회의장,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방안 논의 |
| 12월 19일 |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새로운물결’을 공식 창당하고 당 대표에 취임 |
| 12월 20일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정 협의를 열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
• 박병석 국회의장, 강원 철원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 격려 |
| 12월 21일 |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의사 밝혀 |
| 12월 24일 |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결정 |
| 12월 26일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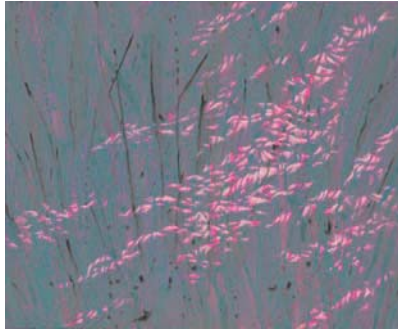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1월 작품전 국회의원화관 1층 아트갤러리

| 인체 풍경-주름 |

2022. 1. 3. - 1. 14.



작가 : 김철규 / 추천 : 송영길 의원

| 비우다, 空 |

2022. 1. 17. - 1. 28.



작가 : 김규리 / 추천 : 최강욱 의원

-편집후기-

국회보에는 여야가 서로 칭찬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담는 시간이 1949년부터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지 국회보가 2022년에도 우리 사회와 정치에 울림을 주는 깊은 샘이 되길 바랍니다. - 이복우 공보기획관

힘들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한 달 먼저 새해를 시작한 국회보가 2022년 1월호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울한 소식 대신 밝고 희망 가득한 이야기로 채울 수 있도록 임인년 한해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현아

지난 한 해동안 국회보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랑이 기운 넘치는 새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고영선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흑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용감한 동물입니다. 이런 호랑이처럼 우리 모두 위기 속에서도 용감하게 힘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박민선

새 달력 첫 장을 넘기며 새해를 위한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웃을 일 많고, 무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국회보 독자 분들도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